

노총연구원 연구서 65

고용안정조직과 직업훈련 연계방안 I

- 서울·경기지역 민간 고용안정조직 실태조사 보고서 -

엄 규 속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
발 간 사

대량실업이 발생하자 지금까지 고성장 저실업에 익숙해있던 정부의 고용정책은 일대 혼선을 빚었으며, 이는 곧 노동자와 실업자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실업대책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투입하였지만 효과적인 실업극복이나 고용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부의 고용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치 경제위기가 지나가서 경제성장이 회복되면 이전과 같이 성장이 곧 복지이라고 가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우리 나라에도 향후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여러 가지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21세기의 전조 속에서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고용정책의 기조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로 전환하면서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축소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고용정책의 전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야 하는 노동시장정책기구 중의 하나가 바로 공공 고용안정조직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집약된 정보를 기반으로 실업이 발생하기 이전에 또는 실업기간을 최소화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자를 다른 일자리로 연결시키고, 또 가능한 한 고용보험 상의 고용안정사업 등을 활용하여 실업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조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라면 여러 가지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즉각 연결시켜 노동능력의 상실을 방지하는 것도 고용안정조직이 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공공 고용안정조직은 양적으로는 급격히 확대되었지만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방노동관서를 통한 재취업률은 10%대에 머물렀고 직업훈련을 받은 이후의 재취업률도 20% 미만이어서 가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부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이나 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공공 고용안정조직의 무능함과 화급한 고용안정사업의 요구를 감지하고 자발적으로 민간 고용안정조직을 결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민간 고용안정조직들은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되면 노동능력이 있는 실업자에게 자활지원을 하는 통로로서 기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 고용안정조직과 더불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부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정착가능성을 고려하여 90년대 중반 이후 생겨난 서울·경기지역의 민간 고용안정조직들을 조사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주 대상집단이나 사업내용 등을 정리한 것이며, 후속연구를 통해 민간고용안정조직과 공공고용안정조직의 연계방안, 지역 차원의 민·관 공동의 고용정책 구상 등에 대한 정책제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실태조사에 응해주신 많은 단체 및 기관의 담당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하고, 면접원으로 일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권준희, 김락건 두 학생의 수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연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중앙연구원의 엄규숙 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 연구자의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1999년 12월

한 국 노 동 조 합 총 연 맹
위 원 장 박 인 상

<제 목 차 례>

I. 머리말 : 민간고용안정조직 실태조사의 목적과 의의	1
II. 고용안정조직의 중요성	6
III. 공공 고용안정조직의 현황과 문제점	10
IV. 민간 비영리 고용안정조직의 의미와 기능	16
1. 민간고용안정조직의 향후 변화 가능성	16
2. 민간고용안정조직의 분류	17
V. 서울 경기 지역 민간고용안정 조직의 유형별 특성 ...	20
1. 자활지원센터	20
2. 여성 대상 민간 고용안정조직 : 일하는 여성의 집	25
3.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센터	33
4. 종교단체가 주관하는 민간고용안정조직	33
5. 사용자 단체의 취업알선센터	41
6. 시민사회 연합단체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센터	43
7. 지역운동에 기반한 고용안정센터	43
8.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51
9. 재야운동단체에서 주관하는 고용안정조직	55
10. 장애인을 위한 취업알선센터	58
VI. 향후 발전방향	59

VII. 서울 경기지역 민간 고용안정조직 실태조사 결과	
- 단체별 현황	68
1. 자활지원센터	68
2. 여성 대상 민간 고용안정조직 : 일하는 여성의 집	73
3.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고용안정센터	82
4. 종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실업자지원센터	85
5. 사용자 단체에서 주관하는 취업알선센터	90
6. 시민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고용안정센터	96
7. 지역운동단체에서 생성된 고용안정센터	99
8. 사회복지법인, 복지관	105
9. 재야운동단체에서 주관하는 고용안정센터	112
<별첨> 실태조사 면접지	114
- 민간 고용안정조직 운영현황, 특성, resource, 주요 사업, 실업자 응답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	
<참고문헌>	116

<표 차례>

<표 1> 공공고용안정조직의 취업률(1999. 6.)	2
<표 2> 직업안정기관 국제비교	2
<표 3> OECD국가 평균 적극적 실업대책 사업의 지출비율과 1999년 한국 실업대책 예산의 비교	8
<표 4> 공공고용안정조직 업무 및 특성(예)	14
<표 5> 자활지원센터 운영현황(1999. 10. 31. 현재)	12
<표 6> 자활지원센터의 특성	24
<표 7> 여성발전센터	27
<표 8>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여성고용안정조직	28
<표 9> 민간 여성고용안정조직의 특성	32
<표 10>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고용안정조직	36
<표 11> 종교단체에서 주관하는 민간고용안정조직의 특성 ...	39
<표 12> 사용자단체에서 운영하는 취업알선센터의 특징	42
<표 13> 시민단체연합	47
<표 14> 지역운동으로 형성된 고용안정조직의 특성	50
<표 15> 사회복지관	54
<표 16> 재야운동단체	57
<표 17> 장애인을 위한 취업알선센터	58
<표 18>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73개 공공근로사업 중 민간단 체의 사업참여 형태를 취하는 대표적 사업	64
<표 19> 자치단체 시행사업	64

<실태표- 1> 관악자활지원센터	6
<실태표- 2> 마포자활지원센터	7
<실태표- 3> 광명 자활지원센터	7
<실태표- 4> 성남자활지원센터	7
<실태표- 5> 강서 일하는 여성의 집	7
<실태표- 6> 구로 일하는 여성의 집	7
<실태표- 7> 동작 일하는 여성의 집	7
<실태표- 8> 부천 일하는 여성의 집	7
<실태표- 9> 인천 일하는 여성의 집	7
<실태표-10> 은평 일하는 여성의 집	7
<실태표-11> 마포신촌 일하는 여성의 집	7
<실태표-12> 송파 일하는 여성의 집	8
<실태표-13> 성남 일하는 여성의 집	8
<실태표-14> 실업자 종합 서울 지원센터	8
<실태표-15> 하남지역 건설일용 노동조합	8
<실태표-16> 성북 고용안정센터	8
<실태표-17> 노원 고용지원센터	8
<실태표-18> 보현의 집	8
<실태표-19> 시립 영등포 근로자 합숙소 보현의 집	8
<실태표-20> 내일을 여는 집	8
<실태표-21>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 특별시회	9
<실태표-22> 대한건설기계협회	9
<실태표-2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력정보센터	9
<실태표-24> 한국건설기술인협회	9
<실태표-25>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산업인력정보센터	9
<실태표-26> 인천경영자협회 부설 인재은행	9
<실태표-27>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9
<실태표-28> 성남시민실업극복운동본부	9
<실태표-29>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9

<실태표-30> 서울북부 실업자사업단 성북지부	9
<실태표-31> 서울북부 실업자사업단 노원지부(본부)	100
<실태표-32> 서울북부 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	101
<실태표-33> 관악주민연대	102
<실태표-34> 고용안정과 실업자문제해결 위한 경기동부대책위	103
<실태표-35> 방배종합사회복지관	105
<실태표-36> 서초종합사회복지관	106
<실태표-37> 사랑의 전화	107
<실태표-38>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취업정보종합센터	108
<실태표-39>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내 북부취업정보센터	109
<실태표-40>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자활지원사업	110
<실태표-41>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무료직업소개소	111
<실태표-42> 열린사회동대문중랑시민회	112
<실태표-43>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	113

I. 머리말

민간고용안정조직 실태조사의 목적과 의의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제기된 한국의 공공고용안정조직에 대한 비판은 양적·질적 차원에서 적절한 수요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1999년 6월 현재 한국의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취업률은 평균 9.8%로 매우 저조하고(<표 1> 참조) 1998년 이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고용안정조직을 확대하여 왔지만 여전히 직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실업자 및 구직자 수의 배율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양질의 직업안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표 2> 참조).

원칙적으로 고용안정조직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시키는 데에 그 일차적 기능이 있다. 특히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고용구조의 변동 및 불안의 시기에 전반적인 노동력 수급의 변동에 대한 예측과 조정으로 구조적인 실업을 예방 및 최소화하면서 노동자의 훈련수준에 적합한 일자리의 알선, 직업전환 및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된 상담, 특히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문제집단(여성, 장애인,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에 대한 일자리 알선 나아가서 적당한 일자리가 부재할 경우 직업훈련, 공공근로 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의 연결 등이 고용안정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이다. 특히 이 중에서 1998년처럼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이 급격히 축소된 경우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하여 장기적인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하면서 구직자의 고용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음 일자리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1> 공공고용안정조직의 취업률(1999. 6.)

	평균	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시·군·구	산업인력공단	기타
취업률(%)	9.8	18.5	3.5	17.5	2.1

자료 : 정인수 외, 1999.

<표 2> 직업안정기관 국제비교*

국 가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한국
기관수	1,159	842	570	619	119
직원수(명)	34,000	93,000	11,000	15,320	2,690
직원 1인당 노동자수(명)	745	364	325	3,401	4,235
운영·관리비/GDP	0.20%	0.24%	0.25%	0.03%	0.012%
취업알선에 의한 취업률	73%	71%	68%	17%	10%

주 : 1) *는 각국 1997년 기준, 한국은 1998년 3월말 기준.

자료 : 유길상 외, 1999, 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 1998 참조하여 재
작성

한국의 고용안정조직은 1998년 8월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안정
과와 고용보험과를 통합하여 고용안정과로 개편하고 취업알선,
고용보험업무, 능력개발 및 각종 실업대책업무를 통괄하는 종합
고용안정서비스를 제공하는 One-Stop-Service 조직으로 그 골
격은 갖추었지만 아직까지 실업자 특성에 적합한 노동시장 프
로그램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1998년 6월 현재 직업훈련을 받은 이후의 취업률은 17%에 불
과하고(한국노동연구원, 1998), 한 연구에 따르면 실업대책사업

이 공식적 실업자를 포괄하는 정도도 직업훈련(4.2%), 공공근로(7.7%), 실업자 대부사업(1.7%), 고용안정서비스(23.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1999, 147).

공공 고용안정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자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용안정조직들이 생겨났으며 시민 사회단체의 연대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가 발족되면서 정부의 고용정책의 빈틈을 메우려 민간 차원에서 기금을 모집하고 실업대책 제안 사업 공모를 통해 민간단체들의 자생적인 실업대책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고용안정서비스가 불충분하다는 인식 아래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민간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 내용은 민간직업소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허가제에서 각각 등록제 및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동 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를 폐지하였다. 무료 직업소개사업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에 한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가능해지고 유료 직업소개사업은 자본금 5천 만원 이상이면 등록을 통해 개소가 가능해지고 일정 기간 경과 이후 허가를 갱신토록 하던 규정마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분야에 존재하던 대부분의 규제가 폐지되었다. 1998년 8월말 현재 한국의 민간 직업안정기관은 유료 1,670개소, 무료 86개소로 총 1,756개소였으며(한국노동연구원, 1998) 1998년 말의 개정직업안정법은 민간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로 모릅지기 민간 고용안정조직이 공공 고용안정조직을 능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관심의 초점은 공공고용안정조직이 불충분한 현재 한국 실정을 감안하여 비영리 민간조직이 그 기능의

일부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있다. 특히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공공고용안정조직에의 접근을 꺼리는 한계집단 노동자 내지 실업자, 실망실업자들은 정부가 아무리 획기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집단이다. 비영리 민간 고용안정조직은 지역차원의 고용 구조 및 실업자특성을 감안하여 특색 있는 사업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 주도 고용안정조직이 갖는 경직된 사업구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재원조달에 편차가 심하고 직접 수행하는 고용안정사업이 영세성, 중복성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대두된 공공고용안정조직에 대한 비판 중 고용안정조직의 실효성 부족 및 직업훈련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을 출발점으로 삼아 어떻게 하면 고용안정사업의 민·관 분업을 정착시키고 특히 고용안정조직에서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관심에서 출발한다. 특히 자발적으로 형성된 민간 비영리 고용안정조직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지역차원의 고용창출사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에 일차적 관심이 있으며 서울 경기 지역 민간고용안정조직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일차적 작업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차기년도 민간고용안정조직 정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이러한 연구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 나라의 고용안정조직의 구도가 향후 공공 및 민간 사이의 분업 형태로 정착된다고 할 때 민간 비영리 조직이 담당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영역이 어떠한 것인지 또 이 조직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노동자 및 실업자 집단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간 고용안

정조직에 대해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관심, 특히 비조직 노동자에 대한 접근 가능성 및 그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급격한 고용구조의 변동을 고려할 때 이미 핵심노동시장으로의 흡수가 불가능한 노동자집단에 대해 민간 고용안정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고용안정 및 유지 나아가서 창출효과에 대해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고용안정조직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제Ⅲ장은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현재 한국 공공 고용안정조직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제Ⅳ장에서는 공공 고용안정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 비영리 고용안정조직이 갖는 의미와 기능이 특히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과 관련하여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 짚어 보겠다. 제Ⅴ장에서는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민간고용안정조직을 주관단체, 대상집단, 지역성 등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사업내용, 대상집단 등의 특징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제Ⅵ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통괄하여 향후 민간고용안정조직이 전반적 고용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와 가능성, 한계, 공공고용안정조직의 개선방향 및 민·관 협력적인 고용정책 정착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제Ⅶ장에서는 실태 조사된 각 단체의 사업내용과 특징을 <실태표>의 형식으로 첨부할 것이다.

II. 고용안정조직의 중요성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업상담 및 알선업무는 원칙적으로 공공 고용안정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민간 고용안정조직은 그 성격상 전반적 고용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책임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고용안정조직의 경우 안정적인 고용안정서비스보다는 성과위주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업자의 지속적 취업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선진국의 고용안정서비스의 운영형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정부의 일반행정조직으로 고용안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미국, 영국 등의 방식과 노·사·정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자치행정 형식으로 특수 행정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의 방식, 그리고 직업알선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업무 담당기구와 실업보험의 운영기구가 정부와 노조(혹은 자치행정기구)의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등의 방식이 그 것이다(정인수 외, 1999).

선진국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직업안정사업에 관한 한 정부 또는 노·사·정 협력기구에서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조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착되어 왔으며 민간 (유료)고용안정조직이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렇듯 직업안정사업을 정부가 주관 또는 공공기관의 책임 아래 두는 것은 노동력 상품의 특성상 민간기구에 의한 수급조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공공 직업안정사업이 정착되지 않은 20세기 초반에는 지역공동체, 노동조합, 장인조합, 사용자들이 주관하여 원시적인 직업소개소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사용자나 노동조합의 직업소개소의 경쟁관계가 결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료 직업소개소들은 안정적인 직업알선보다는 알선회수에 치중하여 수수료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난립한 민간조직을 통폐합하여 공공고용안정조직으로 흡수하여 오늘날까지 연방고용청이라는 노·사·정 협력기구로 운영해오고 있다(엄규숙, 1999b).

고용안정조직의 중요성은 선진국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해 투여되는 사회보장지출 중 고용안정조직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중이 적어도 5분의 1 수준으로 매우 크다는 데에서 증명된다. <표 3>은 OECD 국가의 1998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사회보장지출을 각 사업별로 분류해 평균을 구한 것과 한국 실업대책 사업을 대비한 것이다. 고용안정조직에 대한 지출은 OECD 평균이 21%임에 비해 한국은 2.4%에 불과하며 이는 직업훈련 및 공공부문 고용창출에 한국의 재정 수준을 감안할 때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적 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음을 시사한다(엄규숙, 1999a).

<표 3> OECD국가 평균 적극적 실업대책 사업의 지출비율과
1999년 한국 실업대책 예산의 비교

사업분야	OECD 평균(%)	한 국		
		해당사업	예산 (총 3조 311억 원)	적극적 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율 (%)
고용안정조직	21	구인·구직 연계체계 확충, 일하는 여성의 집	739	2.4
직업훈련	27	실업자 직업훈련, 여성직업훈련	8,057	26.6
민간고용에 대한 임금보조비 지원	11	고용유지지원	4,915	16.2
공공부문 고용창출	14	공공근로사업	16,000	52.8
청소년실업대책	12	졸업예정자 대책	600	2.0
장애인 실업대책	15	타 사업에 포함	-	-

자료 : OECD, What works among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experiences,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 Occasional Papers No. 35, 1998, 노동부,
'99년 종합 실업대책, <http://www.molab.go.kr> 참조하여 재작성

선진국에서 설정하는 공공 고용안정조직의 기능은 비단 실업
자뿐만 아니라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취업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알선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며
고용안정조직의 성격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운영
을 주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의 원활한 수행은 구인 및 구
직 정보의 투명한 집적, 고용안정조직 고객의 실업 및 취업경력
에 대한 장기적 정보의 축적 및 활용방법,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지역 인력수급 특성에 따른 적절한 배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가에 따라 사용자의 구인등록을 의무화(노르웨이, 스페인)하는가하면, 민간 유료 고용안정조직의 허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한다(유길상, 1998).

발달된 공공 직업안정 서비스는 구직자의 특성별 취업 상담과 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데 스웨덴의 경우 전문직종(예능인, 대학, 금융기관, 건축, 전자 등)에 대한 별도의 고용사무소가 존재하며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각종 장애인에 대한 심층적 상담, 치료 및 훈련을 통한 취업촉진 및 채용병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고용사무소도 별도로 존재한다(유길상, 1998). 영국의 공공 고용안정조직도 취업알선 외에 구직자 세미나(구직자에게 구직 관련 기법, 자기소개, 면접 기술 등을 집중 지도), 취업경력재점검 세미나(전직 전문직 및 관리직 실업자의 과거 직장 경력 재점검 및 재취업 심층 토론, 교육 프로그램), 장기실업자 구직 프로그램, 시험취업(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시험적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실업자 교육훈련,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를 위한 워크숍, 24개월 장기실업자를 위한 재출발 코스 등 실업기간에 따라 적용 프로그램을 세분화하고 상담 및 교육의 강도를 분화시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유길상, 1998).

효율성 있는 직업안정 서비스는 단순히 해당 고용안정조직의 프로그램 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노동시장의 전반적 상황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교육에서부터 직업교육을 강화하면서 학교탈퇴자에 대한 직업안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직업선택, 진로지도 등 예비 취업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Ⅲ. 공공 고용안정조직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공공 고용안정조직은 실업대란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맞은 대규모 실업사태는 어떠한 노동시장 프로그램도 그 적극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사후대책으로 기능 하게 하였으며 이는 특히 실업자의 소득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심각성을 드러낸 바 있다 (한국노총, 1998).

특히 공공 고용안정조직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특성을 파악하고 각 실업자 집단에 적합한 실업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1998년 및 1999년 시행된 실업대책의 문제점은 실업자군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백화점식 실업대책에 재원을 투입하여 정책목표와 대상집단 사이의 효과적 연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공근로사업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대거 참여한다거나 직업훈련에도 실제 실업자는 생계를 해결하지 못해 참여를 꺼리는 반면 별다른 훈련필요가 없는 사람이 훈련을 받는 등의 문제는 효과적인 직업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구인·구직의 연결 뿐 아니라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적절한 배분도 사실은 고용안정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때에만 가능하다.

고용안정조직이 위와 같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앞서도 지적되었듯이 고용안정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1998년 8월 말 현재 공공 고용안정조직은 지방노동관서 46개소, 고용안정센터 32개소, 인력은행 14개소 등 총 94개소로 직원은 1,801명으로 집계되었다(유길상, 1998).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진국 수준에 비해 한국의 노동자 및 실업자 수를 고려하여 조직 및 인력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둘째, 이러한 공공 고용안정 인프라의 불완전성은 공공 고용안정조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데 이 것이 민간 유료 직업소개소들이 난립하게 되는 이유이다. 실제로 많은 실태조사에서 실업자들은 공공 고용안정조직의 취업알선기능에 대해 매우 깊은 불신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인력 수급이 대부분의 경우 비공식적인 연결망(친지, 친척 등의 소개)이나 매스 미디어를 통한 구인광고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1999, 171). 이 조사에 따르면 공공 고용안정조직을 통해 구직을 하는 비율은 전직 임금근로자의 5.8%로 저조하였고 구직등록도 17.3%에 머물렀다. 구직등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것으로 실제 1998년 실업자가 150만을 웃돌 때 지방노동관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찾아온 실업자를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그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셋째, 지방노동관서가 실업급여 수급창구로만 인식되고 그 직업알선기능에 대해 불신이 팽배한 것은 고용안정 업무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데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 한국의 공무원제도는 순환보직제가 정례화 되어 직업안정을 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부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지방노동관서의 경우 1년 이상 같은 업무(직업안정 및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소수에 불과하며 이는 전문적 직업상담, 진

로지도 및 취업알선 나아가 노동시장 프로그램 추천 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최근 확대된 고용안정센터와 인력은행에서는 민간 계약직 전문요원을 충원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업무 담당자 자신의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업상담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스럽고 신규 충원자의 전문성도 업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공공 고용안정조직의 직원들의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인 구인 및 구직 정보 시스템의 존재와 직업정보, 직업훈련정보, 직업진로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 적성검사 등 체계적인 직업상담 및 알선을 위해 필요한 직업안정 소프트웨어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전문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유길상, 1998). 이러한 정보는 한편으로는 취업자 및 실업자의 경력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한 것,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노동시장 프로그램 및 소득보전 프로그램의 정보를 DB화 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개별 고용안정조직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후자는 앞의 정보를 제공 가능한 소극적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에 맞추어보고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본 실태조사에서는 민간고용안정조직과 비교를 위해 공공고용안정조직 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으나 그 결과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나타났다. 세 곳 모두 주요 업무는 구인과 구직의 연결이지만 조사기간 중 실제 상담업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한산하여 구직자가 공공고용안정조직을 즐겨 이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로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1999년에는 1998년에 비해 상담건수가 급격히 줄

있음을 시인하였다. 1998년에 공공고용안정조직을 찾는 구직자의 주된 동기는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것이었음은 다른 연구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 있다(한국노총, 1998). 실업급여 수급창구 이외에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연결기능이 공공고용안정조직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지방노동관서를 양적으로 확충한다고 해도 질적 서비스 제고라는 과제로 남을 것이다. 실제로 조사대상 공공고용안정조직 중 두 곳에서는 발굴단 내지 개척단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수급자 위주의 서비스를 도입하려 시도하는 중이었으며 Y 구청의 경우 사회복지사를 전문 상담요원으로 채용하여 직업상담에 배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직자 내지 전직을 희망하는 노동자가 즐겨 찾는 장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전문인력의 배치는 그 실효성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조사된 공공고용안정조직의 또 다른 문제점은 민간조직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에서 발견된다. 실태조사 대상인 많은 민간고용안정조직들은 공공고용안정조직의 DB 공유 등을 원하였으며 자신들의 업무능력에서 벗어나는 전문적 상담이나 구인-구직의 연결은 공공고용안정조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공고용안정조직은 민간단체의 업무협조 요구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있다. 지역의 특수한 고용구조나 빈곤구조에 대해 정보를 갖고 있으며 대상집단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는 민간단체의 장점을 공공고용안정조직이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표 4> 공공고용안정조직 업무 및 특성(예)

명 칭	Y구청 취업종합센터	K구청 취업정보센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S-K지역 취업정보센터
주대상집단	관내 실직자(여성 60%, 20~30대가 대부분)	구직자, 구인업체	구직자 및 구인업체
주요업무	구인-구직 연결	① 구인-구직 연결 ② 개척팀(사업장 에 구직자 홍보)	구인-구직 연결(서울, 경인지역 포괄, 중소 영세업체 다수, 20~ 30대, 사무, 영업, 경 리 등)
재 원	구청예산	구청예산으로 운영	공단 재원으로 운영
상근인원	공무원 3명, 상담 원 3명, 발굴단 6 명(2명이 사회복지사 자격 소유, 노동부 고용안정 서비스훈련 수료)	6명(4명 상담업무)	8명 (국내 6명, 해외 2명)
노조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 여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특기사항	매우 한산함	같은 지역 내 민간 고용안정조직에 비 해 한산함	1992년도 설립, 1998 년부터 전국적 조직망 형성. 한산함

공공고용안정조직이 활성화되어 구인·구직의 연결 뿐 아니라 실업자의 노동시장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고용정책의 많은 사업들은 공공성을 지닌 것으로서 민간에서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한 민간단체의 사업들은 영세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사업을 지역고용정책 차원에서 총괄하는 일은 공공

고용안정조직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공공
고용안정조직의 취업알선률, 알선을 통한 재취업율이 저조한 상
태에서 이러한 바람은 희망사고에 불과하다.

IV. 민간 비영리 고용안정조직의 의미와 기능

1. 민간고용안정조직의 향후 변화 가능성

1999년 8월 국회를 통과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달리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도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법 15조는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자활급여를 “①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②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③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④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⑤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보건복지부, 1999. 8.)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업급여 비적용 대상인 최저생계비 이하의 실업자 또는 빈곤층에게 생계급여와 동시에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제공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급여는 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시설에 위탁하여 지급될 수 있는데, 민간에서 이러한 자활급여를 담당하는 기구를 동 법 제16조에서 자활후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에 의해 지정될 수 있으며, 자활후견기관 선정할 때 주된 고려사항은 지역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등의 수행능력과 경험이다.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면 노동능력이 있는 급여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①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③ 생업을 위한 자금유

자 알선, ④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⑤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⑥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사업(보건복지부, 1999. 8.)”을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후견기관에 “① 자활후견기관의 설립·운영비용 또는(위의 사업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③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등을 할 수 있도록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향후 지역운동 또는 시민 사회운동 차원에서 형성된 민간 고용안정조직들이 자활후견기관화하여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고용안정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 비영리 단체들이 이미 일부 고용안정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는데 이들의 전문적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각 단체별로 주 대상집단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특성별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당한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민간 고용안정조직의 강점은 현재 공공고용안정조직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도시지역 영세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이나 대상집단에 대한 기존의 친밀도를 유지하면서 고용안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민간고용안정조직의 분류

아래에서는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민간단체 중 고용안정을 수행하는 경우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겠다. 조직의 설립

근거, 특수 대상집단, 주관 단체, 시민사회운동과의 연계 등은 민간단체의 성격을 조금씩 차이 나게 한다. 1998년 이후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나뉘어 취업알선, 실직자 쉼터, 방과후 학교 등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 사업, 의료지원, 무료급식, 푸드뱅크, 노숙자 숙식제공 등 대량실업과 빈곤심화에 대응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본 실태조사에서는 서울 경기지역에서 민간고용안정조직의 기능을 일부라도 담당하는 단체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 ①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지원센터
- ② 여성을 위한 민간고용안정조직
- ③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센터
- ④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실업자 지원센터
- ⑤ 사용자 단체에서 설립한 취업알선센터
- ⑥ 시민사회 연합단체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센터
- ⑦ 지역운동 차원에서 설립된 고용안정센터
- ⑧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취업알선센터 또는 복지관
- ⑨ 기존의 재야운동단체에서 운영하는 실업자지원센터
- ⑩ 장애인을 위한 고용안정센터

위와 같은 기준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민간고용안정조직의 성격이 주관단체, 대상집단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임의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민사회운동과 지역운동 단체 및 재야운동 단체의 구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운동원들이 주도하는 사업을 재야운동 단체 주관사업으로 분류하고 지역운동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관심이 운동의 주를 이루는 경우로,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각종 시민운동 및 사회운동 단체들이 연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삼아 분류하였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조사된 단체들의 개별적 특성과 집단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V. 서울 경기 지역 민간고용안정 조직의 유형별 특성

1. 자활지원센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자활지원센터는 모두 20개소로서 서울지역 4개소, 부산, 대구, 울산, 경기지역 각 2개소, 여타 지역에 1개소씩 설립되어 있다(<표 5> 참조). 전체에서 대한성공회가 운영하는 자활지원센터가 7개소로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그 외 종교 또는 복지사업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사회복지법인도 7개소로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시민단체, 학교, 주민운동단체 등 다양한 단체가 자활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착과 관련하여 향후 자활후견기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자활지원센터들은 기존의 민·관 협력사업의 좋은 예이다.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정부는 자활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200개소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활지원센터 확충 계획은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과정에서 노동능력이 있는 실업자 또는 빈곤층에 대해 자활을 촉진하는 제도적 인프라로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의 자활지원센터 뿐 아니라 기존의 민간고용안정조직들이 자활후견기관으로 선정되는 데에 관심이 있으며 이는 자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노동시장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자활후견

기관의 확대는 공공고용안정조직이 접근하기 어려운 실업자 및 빈곤층에게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자활능력을 유지, 강화시키는 민간 고용안정조직의 기능이 정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5> 자활지원센터 운영현황(1999. 10. 31. 현재)

시·도	센터명	법인명
서울(4개소)	서울 관악 자활지원센터*	재단법인 대한 성공회
	서울 노원 자활지원센터*	재단법인 대한 성공회
	서울 마포 자활지원센터*	학교법인 이화학당
	서울 성북 자활지원센터**	재단법인 대한 성공회
부산(2개소)	부산 사상 자활지원센터**	한국 청십자 사회복지회
	부산 동구 자활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대구(2개소)	대구 북부 자활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
	대구 남부 자활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
인천(1개소)	인천 동구 자활지원센터*	재단법인 대한 성공회
광주(1개소)	광주 남구 자활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대전(1개소)	대전 동구 자활지원센터*	재단법인 대한 성공회
울산(2개소)	울산 남구 자활지원센터***	YMCA
	울산 북구 자활지원센터***	참여자치연대
경기(2개소)	경기 광명 자활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경기 성남 자활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 참사랑 복지회
강원(1개소)	강원 태백 자활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태백 사회복지회
충남(1개소)	충남 천안 자활지원센터***	재단법인 대한 성공회
전북(1개소)	전북 전주 자활지원센터***	재단법인 대한 성공회
전남(1개소)	전남 해남 자활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
경북(1개소)	경북 포항 자활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주 : 1) *는 1996년 시범, **는 1997년 지정, ***는 1998년 지정, ****는 1999년 지정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실태조사에서는 운영단체가 각각 성격을 달리하는 서울 경기 지역 4개의 자활지원센터(관악, 마포, 성남, 광명)를 선택, 조사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실태표 1~4> 참조).

관악자활지원센터의 경우 설립된 지 3년이 경과하였고 성공회의 지역별 센터 운영경험이 집적되어 협동조합 등 자활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특별취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봉제협동조합의 경우 10명 조합원을 포함하여 약 30여 명이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다. 협동조합사업을 통해 자활지원이 어려운 집단은 정부의 특별취로사업을 위탁받아 참여시키고 있다. 지역고용구조가 건설 일용직 노동자나 비정규 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들의 불안정한 생활 상태 및 고용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센터의 주 대상집단은 정규직 경험이 없이 유동적 직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거나, 해당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지역 주민연대와의 유기적 관계가 매우 돈독한 경우이다.

마포 자활지원센터의 경우 자활지원사업으로 수행되는 세탁업 협동조합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임대아파트 지역의 비정규 노동자, 불안전 고용층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를 주 대상집단으로 삼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정부의 특별 취로사업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광명자활지원센터에서는 가사 도우미, 간병인, 파출부 등 용역업의 알선과 공동 부업장, 도배 사업단, 세차 사업단, 재활용 사업단 등을 운영하고 고령자 자활사업을 일부 시행하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인력)의 간병인 교육을 위탁 수행하고 이들 중 상당수를 취업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명시가 주거 및 소비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의 임대 아파트 주민이나

일용직, 저소득 자영업자, 불안전 고용층을 주 대상집단으로 삼아 서비스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 자활지원센터는 생산자 협동조합 사업으로 도시락 공장을 운영하고 부업장을 운영한다. 주 대상집단은 남성은 일용직 건설노동자 출신, 여성은 파출부 등 일용직 출신이 주를 이룬다.

자활지원센터의 특징적 사업은 생산자 협동조합의 운영이라고 하겠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이 자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립을 이루는 것이 사업의 목표이다. 주된 대상집단은 자활지원센터가 설립된 지역이 임대아파트 지역 내지 기타의 도시빈민이 밀집된 지역이고 센터의 주된 고객도 이 지역의 전직 비정규 노동자, 정규적 소득이 없는 불안정 고용층 및 생활보호대상자이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정규적인 구인·구직 절차를 통한 취업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노동력의 특성상 핵심 노동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취업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활지원사업은 생산자 협동조합 형식으로 소규모 공동 창업에 대한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부업방 등 부족한 소득에 대한 보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거리 마련, 또는 용역직에 대한 단기적 취업알선 등의 형식을 띠게 되고,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자활지원센터에 청소년교실이 정착되어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단체와의 연계가 강한 경우(관악자활지원센터)도 있고, 대부분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과의 업무 협조가 민간단체와의 연계보다 강한 편이다.

<표 6> 자활지원센터의 특성

단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악자활지원센터 - 광명자활지원센터 - 성남자활지원센터 - 마포자활지원센터
특기사항	-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전국에 20여 개의 자활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생산자 협동조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이 자활공동체를 통하여 자립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주대상집단	-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건설노동자 및 파출, 식당종업원 등의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생산자협동조합 형태의 자활공동체 형성 중에 있음.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반 정보제공 및 자원제공, 금융알선 및 공간마련 등 자활하기까지 필요한 인프라 등을 자활지원센터가 구축해준다(도배, 건설노동, 청소용역, 생활현복, 세탁, 제과, 제빵 등 업종 다양). - 청소년교실 운영 : 진로탐색 캠프 및 공부방 운영
재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시비+구비 전액국고 지원이며 - 자활지원센터에 9천만 원 청소년교실에 3천만 원 지원됨.
상근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인원 6~8명 정도이며 보수는 60~80만원 정도 - 지역운동가, 빈민운동가, 및 사회복지사 등. - 상근자들이 직접 자활공동체에 대한 교육실시
노조/ 민간단체 연계여부	- 노조와의 직접적인 연계는 없다. 관악자활지원센터의 경우 관악지역연대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역할을 중요시여기는 한편 이대 성산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자활지원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의 성격이 강함.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구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구 공무원들과의 관계 긴밀. 일정부 분 구의 감독 통제를 받고 있음. 재정적으로는 중속되어 있으나 사업자체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실업대책 사업위탁	- 특별취로 사업 및 민간공공근로 위탁: 4개월 동안 일당 2만원
특징	-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중심인 관악 자활지원센터의 경우 부정기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고용상태가 아님. 정부지원이기 때문에 관급공사에 우선권을 줌. 큰 공사를 통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지만 지속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일정치 않음. 자활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가도 비조합원의 경우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음 (지속성이 보장 안될 수도 있음). 안정적인 공간이 마련되어 정규적인 생산을 하는 경우 고용이 미약하나마 창출되고 있음

2. 여성 대상 민간 고용안정조직 : 일하는 여성의 집

공공고용안정조직의 상담체계는 여성만을 별도의 대상집단으로 선정하여 관리되지 않고 있다. 기관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직자를 희망직종에 따라 관리직, 전문직, 준 전문직, 기능직, 농·어업, 판매직, 서비스직, 단순노무, 사무직 등으로 분화하여 관리하며 구직자 유형을 연령, 직종, 학력, 기능수준, 임금, 규모, 산업, 고용형태 등으로 분류하는데 연령별 및 성별 관리에 주안점이 두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여성노동자협회의 공공취업알선기관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실업자의 경우 공공고용안정조직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취업에 대한 기대도 낮기 때문에 공공취업알선기관의 이용도가 남성보다도 더 낮은 실정이다. 지방노동관서에서는 별도의 여성전담창구가 운영되는 경우가 드물고, 인력은행의 상담창구에 잠재인력 창구라 하여 신규취업을 원하는 주부에 대한 상담을 전담하는 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문제는 구직자는 기혼여성이 많은 반면 구인은 미혼을 선호하기 때문에 적절한 연결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20~30대 상용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고용안정조직의 취업알선은 우리 나라 여성의 특이한 고용구조를 고려할 때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많은 여성이 공공고용안정조직을 통한 취업을 단념하고 민간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직을 함으로 인해 알선피해가 속출하고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실업자에게 다양한 취업정보나 상담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여성실업 및 취업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999년 실업대책에서 일하는 여성의 집 확충을 여성실업대책의 한 축으로 삼고 여성만을 위한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기관으로 특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1998년 22개소에 1999년에 103억 원을 투입하여 8개소가 증설될 예정이었으며 여성단체의 기존 사업에 노동부가 재원을 지원하여 여성관련 고용안정기관으로 정착시킨다는 구도이다.

실태조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의 9개 일하는 여성의 집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공공고용안정조직과의 차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울지역의 1개 여성발전센터를 참고로 조사하였고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고용안정사업도 실태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여성발전센터의 경우 주된 업무내용은 여성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이다. 특히 직업교육의 경우 저렴한 수강료로 인해 매달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는데 수강생은 이를 취업의 준비과정이라기보다는 취미 또는 교양강좌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취업을 원한다고 해도 구직자는 가사 및 육아부담으로 인해 시간제노동을 원하는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은데 비해 구인은 전일제 노동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직업교육이 직접적인 취업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표 7> 여성발전센터

	내 용
설립연도 및 운영주체	- 1985. - 서울시 중부여성발전센터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업무내용	- 여성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교육 및 직업알선 - 한 강좌 당 1달에 7천 원으로 매달 신청자가 쇄도 - 어린이집, 청소년교실 운영 - 이동목욕 등 복지활동진개
고용유지 및 창출효과	- 취업교육이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음 - 취미 및 교양강좌와 같은 역할로 전과정 모두 섭렵하는 이들도 많다고 함
상근인원	- 38명 - 전원 서울시 공무원
재원조달	- 서울시 - 연간 13억 이상
지역고용 구조의 특성	- 육아, 가사노동의 문제로 시간제노동을 원하지만 구인자들은 전일제노동자를 원함. - 서비스업, 파출업 등 일용직에 종사하는 이들 많음
대상집단의 특성	- 서울시 전지역에서 신청자가 쇄도 - 취업에의 욕구가 절실하지 않음. 전업주부 위주.

<표 8 >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여성고용안정조직

	내 용
설립연도 및 운영주체	- 1987. 3. - 서울여성노동자회
업무내용	- 구인구직 상담, 임금체불, 정리해고 상담, 직업훈련, 공공근로 정보제공, 심리검사 및 집단상담, 실직가정 생계지원, 정책제안활동, 여성실직자 상조회 조직, 저소득 아동지도 보조교사 파견활동, 부업방(자활공동체)운영, 어린이집 운영
정부실업대책 위탁여부	- 실직여성가장 훈련 / - 실직자 재취업 훈련 - 고용촉진 훈련 / -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지원
고용유지 및 창출효과	- 구인구직 상담 : 20% 취업률 - 부업방에서 미성사들 자활
상근인원	- 4명 - 공공근로 파견 상담원 : 2명 - 보수 : 50만원정도 - 노동운동가, 학생운동가, 보육관련교사 등으로 구성
재원조달	- 월 820만원정도 - 자체 재원으로 운영, 상조회는 상조회 회비로 운영, 심리검사 및 집단상담은 일부 서울시 보조
지역고용 구조의 특성	- 저소득 - 기업의 성차별 및 성희롱(공장내) - 불안정한 고용
대상집단의 특성	- 30대 후반의 중장년층의 저학력 여성들 - 생계지원이 시급한 이들도 많음
노조 및 지방관서와의 연계	- 전국여성노동조합 주체 집단임 - 구로구청 취업정보은행과 정보교환

1987년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도 여성고용안정사업을 하고 있다. 주된 사업 내용은 구인 및 구직 상담, 임금체불 및 정리해고 상담, 직업훈련 및 공공근로 관련 정보제공, 심리검사 및 집단 상담, 실직가정 생계지원사업, 여성

실직자 상조회 조직, 저소득 아동 지도 보조교사 파견활동, 부업방, 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다양한데 기존의 여성노동자를 위한 활동에 고용안정조직의 기능과 여성노동자를 위한 복지업무를 중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노회의 취업알선은 취업률이 20%로 공공고용안정조직에 비해 높은 편이며, 자활공동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업방에서는 저소득 노동자 또는 실직자의 자활이 봉제업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직여성가장 훈련, 실직자 재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구로 지역의 기층 여성 노동자와 지역의 저소득 여성실업자 등을 주된 대상집단으로 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와의 연계로는 전국여성노동조합을 주관하면서 구로 구청의 취업정보은행과 정보교환을 한다는 점에서 민·관의 네트워크가 단단히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일하는 여성의 집은 위와 같은 고용안정조직과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는 지 살펴보자(<실태표 5~13> 참조).

구로 일하는 여성의 집의 경우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사실상 여노회의 활동 중 일부를 고용안정사업으로 특화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단지역의 생산직 노동자 또는 전직 생산직 실직자나 보험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 및 중장년층 여성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등을 행하면서 정부 실업대책 사업을 일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지역기반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행하기 때문에 지방노동청, 구청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정보 등을 얻고, 실직 여성가장을 위한 프로그램, 실업자 재취업 훈련 등 위탁사업을 수행하며,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지원도 받아서 운영되고

있다. 지역 형편상 취업률은 30% 정도로 공공고용안정조직에 비해 높지만 유망직종을 발굴한 다른 일하는 여성의 집보다는 낮은 편이다.

강서 일하는 여성의 집은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위탁으로 여성 자원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직업훈련의 업종을 취업전망과 연결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잘 드러나는데 주된 훈련직종이 텔레마케터, 만화전문가, 의류 리폼사, 조화기능사 등으로 여성에게 적합하면서도 시장성이 있는 직종을 위주로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민간고용안정조직에서 직업훈련을 병행하여 핵심노동시장에의 적응을 원할 경우 훈련참여자의 인적자원과 훈련직종의 시장성이 매우 중요하고 유망직종 위주의 훈련기관 특화도 가능할 것이라는 민간고용안정조직의 향후 정착과 관련된 시사점을 던져준다.

마포, 신촌, 송파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는 직업훈련 참여자가 반드시 해당 지역주민만이 아니라고 조사되었다. 이는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제공하는 유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즉각적 취업으로의 연결과정이라기보다는 자아개발, 여가선용 등에 이용하는 여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은 훈련기간이 짧아서 훈련 후 직접적 취업이 가능한 경우보다 이차적 보완 훈련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 취업이 절박한 여성이라면 직업훈련 위탁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훈련수당이 생계비에 대한 지원으로는 너무 낮아 기피하기 때문에 실제 훈련수당을 받는 훈련생은 취업 욕구가 절실하지 않은 취업희망자일 경우가 많다. 일하는 여성의 집을 찾는 여성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데 중산층이나 소시민의 밀집 주거지역인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인가에 따라 사업내용도 약간씩 달라지고 있다.

<표 9>는 일하는 여성의 집을 위주로 살펴본 민간 여성 고용안정조직의 특성을 정리한 것인데 대부분 노동부의 재정지원(부동산 임대료 6~8억 정도)을 받아 설립된 후 정부 실업대책을 일부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부여받았으며, 주로 무료 취업알선, 직업훈련위탁사업 등을 하고 있다. 여성을 주대상집단으로 한다는 것은 여성 노동자와 실업자가 내포하는 다양성을 모두 사업의 대상으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하는 여성의 집을 찾는 여성은 전업주부에서부터 정리해고를 당한 여성노동자, 대졸 신규실업여성까지 연령, 학력, 계층별로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성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분화와 그에 따른 취업률 차이에 대한 일차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 유료 취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강생은 즉각적 취업을 원하는 여성으로부터 취업을 희망하지는 하지만 노동시장 경험이 전혀 없거나 노동시장을 떠난 지 너무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재취업에 자신이 없는 여성 등 개인적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와 부천 일하는 여성의 집의 경우는 공단 지역이라는 특성상 일하는 여성의 집 주된 고객도 이 지역의 노동자 출신이 많을 뿐 아니라 지역여성노동자회 및 그 외의 여성노동단체와의 연계가 매우 밀접하였다. 따라서 사업내용도 이 지역 노동자의 전직 특성과 생활상태 등을 고려하여 구성된다. 반면 신탄리 조사된 다른 일하는 여성의 집의 경우 여성노동단체와의 연계가 보이지 않으며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연령 및 학력별 대상집단에 따라 특화 시키는 경향, 즉 고학력 미혼여성에게는 취업가능성이 높은 유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활지원이 필요하고 노동능력이 낮은 여성에게는 여성실직 가장 프로그램 등을 적용하는 대상집단별 적용 프로그램의 특화 현상이 나타났다.

<표 9> 민간 여성고용안정조직의 특성

단 체	- 강서, 성남, 구로, 송파, 동작, 신촌, 부천, 은평, 인천 일하는 여성의 집
특기사항	- 각 여성단체가 노동부 지원으로 정부실업대책 위탁 기관으로 개관. 부동산임대료 6~8억 정도의 지원을 받아 직업교육훈련과 무료직업소개를 하고 있다. 운영주체에 따라 주대상집단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여성취업훈련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주대상집단	- 여성 : 전업주부 및 취업 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함. - 학력, 연령, 계층 다양함.
주요업무	- 무료직업소개소, 직업훈련기관. 강서 일하는 여성의 집은 자원금고 시절의 역량을 바탕으로 특히 취업률이 높음. 직종계발에 주력하고 있다.
재원	- 노동부 지원금+ 법인전입금+ 유료프로그램 수강료
상근인원	- 6~8명 정도이며 여성단체 운동가 출신들이 많고, 전직 교사, 사무직 직원들 및 사회복지사 등으로 4년제 대졸 출신 여성들이다. 보수는 60~80만원선. 강사들은 주로 외부에서 초빙.
노조, 민간단체 연계여부	- 구로 일여, 부천 일여의 경우 지역 여성노동자회와의 긴밀한 관계. 생산직 노동자 중심의 구로 지역의 경우 전국여성노동조합 및 서울여성노동자회와 긴밀한 관계. 다른 일여의 경우 노조와의 관계없음.
공공고용안정조직연계여부	- 별로 없음. 지방 노동청이나 구청의 취업관련 자료들을 공유하는 정도.
실업대책사업위탁	- 실직자 재취업 훈련, 실업여성가장훈련 : 3개월 동안의 훈련수당을 받아가면서 두 번까지 받을 수 있음. 자격제한 있음 - 고용촉진 훈련 -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지원 : 송파, 성남, 구로 등 여성가장겨울나기 및 방과후 아동지도교사 실시.
특 징	- 훈련수당을 받아가면서 하는 직업교육의 경우, 거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반면 유료프로그램의 경우 젊고 취업욕구가 높은 여성들은 취업률이 높다고 함. 정작 생계의 위협을 받는 여성들은 훈련수당을 받기보다는 직접 일터로 나감. 무료직업훈련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중복 수혜 등 문제점이 많음. 프로그램들이 차별화 되어 있지 않음. 일하는 여성의 집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증가함에 따라 회원수가 줄어들고 있음. 프로그램 차별화전략이 필요.

3.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센터

노동조합이 고용안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에 대한 논의는 지역 단위 조직화사업의 중요한 기점으로 논의되어 왔다. 노조에 의한 실업급여 지급이 조직율을 높이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한 스웨덴 등 북구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고용보험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형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제언(권현지, 엄규숙, 이호창, 1999)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한 논의(권혜자, 박선영, 1999)에서도 노동조합의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고용안정사업을 중요한 전략적 거점의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인식은 지역차원의 실업자 지원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나타나는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실제 고용안정사업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역량은 한정되어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평화의 집을 실직자 쉼터 및 상담의 장으로 제공해오다가 재정적인 이유로 폐쇄할 예정이며 지역본부나 지부들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안의 시급성에 밀려 실업자 조직화에 대한 역량투입은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태조사는 민주노총에 소속된 실업자지원센터와 하남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에 대해 실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실태표 14~15> 참조). 특히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고용안정조직의 경우 민간 실업극복국민운동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이 성립되었다는 점이 특기할만하다. 실업자종합서울지원센터의 경우 1999년 초 노동 및 사회단체의 결의로 구성된 것으로서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단체들에서 실무자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센터

상근인원이 형성되었는데 민주노총 파견 실무자의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실업자 지원센터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주대상집단은 중고령, 저학력, 저소득 전직 단순노무직 실업자가 주종을 이룬다. 남성이 70%, 여성이 30% 정도인데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의 비율이 높다.

센터에서 행하는 주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취업알선 및 상담은 고용안정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아이템이다. 서울센터에서는 주대상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상담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에 수용이 어려운 실업자의 경우 공공근로사업 위탁 수행 등을 통해 일자리 마련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앞서 지적한대로 실업자의 가족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복지사업 차원에서 법률상담, 건강프로그램, 장애아 부모를 위한 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활지원사업의 경우는 기존의 자활지원센터에 비해 아직 사업내용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다. 실직가정 돕기 범국민 결연 운동을 펴면서 희망의 카드사업이 실업자지원센터에서 펴는 특이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하남지역 건설일용노조는 지역 건설노동자를 주대상으로 하여 고용안정사업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건설일용직은 고용보험적용도 어렵고 독자적인 고용형태로 인해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등이 매우 어려운 집단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노동조합에서 취업상담, 알선과 일거리가 없을 경우 공공근로 등을 통한 일자리 마련을 시도한다는 것은 향후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취업알선은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인적 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지며 취업이 불가능한 시기에는 산림청의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의 실업대책위와의 연계가 강하며 공공고용안정조직과는

공공근로 위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취업알선사업은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지원으로 수행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주관하는 고용안정조직이 실업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고용구조에 밀착된 사업을 펼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노동자의 특성에 적합한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이 관건인데 일용직 노동조합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 주관 실업자지원센터들의 성격은 비정규직이나 실업자에 대한 조직화사업의 거점으로 이해되기에는 아직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조직화사업과 관련된 노조의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기업별노조체계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나 실업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의 책임과 보호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조직에서의 고용안정사업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권혜자, 박선영, 1999).

고용안정사업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노동조합의 실업자지원센터는 지역단위의 고용정책 수행주체와의 협력관계 수립 및 자체적인 자활 프로그램의 독자성 확보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조직화사업이라는 명분을 동반하면서 고용안정사업을 수행하려 할 때 다른 민간고용안정조직과의 차별성 확보와 전문적 역량 축적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표 10>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고용안정조직

단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자종합서울지원센터 - 하남건설일용노동조합
단체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센터 : 1999년 초 노동·사회단체의 합의로 구성된 것, 따라서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단체에서 실무자를 파견하여 구성함, 단체 중에서도 민주노총 파견 실무자의 비율이 높음 - 하남건설노 : 민주노총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연맹 산하 지역 노동조합
주대상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센터 : 실업자(중고령, 저학력, 저소득 실업자, 단순노무직에 종사했던 실업자가 다수) - 하남건설노 : 하남지역 건설일용노동자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자리 연결 및 일자리 마련 사업(구직·구인상담, 취업상담정보시스템 개발완료, 공공근로 사업시행) ② 실업자를 위한 자활지원 및 복지사업(실직가정돕기 범국민 결연 운동, 희망의 카드사업, 법률상담) ③ 실업자를 위한 기획사업 : 실업자와 함께 하는 '99 희망 만들기 한마당 진행, '99 희망의 행진, '99 희망 문화제, 자치모임방(실업자 사랑방) 운영, 실업자를 위한 무료 생활한방 건강프로그램(9월 9일~10월 14일 매주 목요일 진행), 장애아 부모들의 모임(월 1회 모임으로 정보공유와 토론진행) ④ 민-민, 민-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 서울지역 민-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공공근로 민간단체 참여 민-관 합동 공청회』 개최 ⑤ 기타 실업자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법인 취득, 홍보활동, 대외협력활동, 수련회) - 하남건설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담(산재,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② 무료취업알선센터 사업(1999년 통계 연인원 4만 명 정도),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지원 ③ 산림청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100명) ④ 지자체 위탁사업(도배, 숲가꾸기, 소규모 공사계약 등)

재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센터 : 회계연도 1999년 2월 ~ 2000년 1월까지 실업극복 국민운동위원회에서 사업비, 운영비, 관리비, 활동비 전액 지원 받기로 약정함, 기획사업의 경우 기업에서 협찬을 받아 재정 일부를 충당함 - 하남건일노 : 조합비와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지원, 기타 기금으로 운영
상근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센터 : 총 14인(사무국장 1인, 기획총무팀 4인, 지역지원팀 3인, 고용복지팀 3인, 상담팀 3인) - 하남건일노 : 5명(상담, 회계, 전산, 구인구직 담당)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센터 :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에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상담자가 있을 경우 센터로 연계하여 센터에서 상담활동 수행, 센터 설립 당시 민주노총이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됨 - 하남건일노 : 연맹 및 지역 실업대책위와 연계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센터 : 일상적 연계는 없음, 사안별 연계가 진행됨, 센터에서는 노동부 Work-net을 활용하여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망을 활용하는 수준임 - 하남건일노 : 공공근로와 관련해 협의하는 정도
실업대책 사업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센터 : 공공근로 민간위탁 사업 3단계에서 사업 확정되어 현재 시행 중임 - 하남건일노 : 산림청 및 지자체 공공근로 위탁사업 수행,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가 지원한 무료취업알선센터 사업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센터는 전국센터인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대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남건일노의 경우 조합원들이 모두 일용건설직 노동자들이고 항상 반실업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곧 실업대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청,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새로운 일자리를 활발히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스스로 자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4. 종교단체가 주관하는 민간고용안정조직

종교단체에서 주관하는 고용안정조직은 전형적인 고용안정사업보다는 실직자 쉼터 내지 복지사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를 달리하는 5개소의 실업자지원센터를 실태 조사하였다.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센터 2개소,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보현의 집 2개소와 기독교장로회에서 운영하는 내일을 여는 집 1개소를 방문 조사하였는데 기관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실태표 16~20> 참조).

1990년대 중반부터 자활지원센터 등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경험을 쌓은 성공회의 경우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고용안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성북고용지원센터의 경우 성북자활지원센터와 서울 북부 실업자사업단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취업알선 및 정보 제공사업과 실직가정 지원사업, 푸드뱅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활지원센터와 비교해서는 복지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노원고용지원센터도 성북센터와 유사하게 서울 북부 실업자사업단과의 연계가 강하며 지역의 저소득층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푸드뱅크, 무료급식 사업과 취업알선을 병행하고 있다.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보현의 집은 운영재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용산구 소재 보현의 집은 실직노숙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내용이 단순화되어 있는 반면, 영등포 소재 보현의 집은 서울시에서 근로자합숙소 사업을 위탁받고 재원을 조달 받는 관계로 상근인원도 13명으로 다른 민간고용안정조직에 비해 많은 편이고 실직노숙자에 대한 서비스도 숙식제공, 일자리제공, 복지향상 프로그램, 의료서비스로 다양화되어 있었다.

<표 11> 종교단체에서 주관하는 민간고용안정조직의 특성

단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고용안정센터(성공회) - 노원고용지원센터(성공회) - 시립영등포근로자합숙소(조계종) - 보현의 집(조계종) - 내일을 여는 집(기독교장로회)
단체성격	-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실업대책사업
주대상집단	- 대한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성북고용안정센터, 노원고용지원센터의 경우 지역 저소득층 주민과 실직자(일용직, 임시직 다수), 내일을 여는 집, 보현의 집, 시립영등포근로자합숙소 경우 실직노숙자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고용안정센터, 노원고용안정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실직가정, 저소득주민 지원사업(푸드뱅크와 연계) ② 취업알선 ③ 노원고용지원센터 경우 무료급식 실시 - 시립영등포근로자합숙소, 보현의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실직노숙자 숙식제공 ② 취업알선 ③ 시립영등포근로자합숙소 경우 복지프로그램 실시 - 내일을 여는 집, 무료급식(점심)
재 원	- 성북고용안정센터와 노원고용지원센터의 경우 성공회재원과 지역후원 등으로 운영, 보현의 집과 내일을 여는 집은 종단, 교회재원이 대부분, 시립영등포근로자합숙소의 경우 시의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 예산이 대부분
상근인원	- 성북고용안정센터와 노원고용지원센터 경우 4~5명 정도, 보현의 집과 내일을 여는 집은 사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근인원이 적은 편이다. 시립영등포근로자합숙소의 경우 사업규모도 상당히 크고 상근인원 수도 많다.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성북고용안정센터와 노원고용지원센터는 성공회 나눔의 집, 서울북부 실업자사업단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공동사업 수행 등). 보현의 집, 내일을 여는 집, 시립영등포근로자합숙소 경우 연계 없음
공공고용안정조직 연계여부	- 내일을 여는 집 경우 서대문구청에서 인력지원(도우미사업)

실업대책 사업위탁	- 해당사항 없음
특기사항	- 성북고용안정센터, 노원고용지원센터 경우 종교계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지역에서 빈민운동을 하고 있던 자원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높은 지역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일을 여는 집과 보현의 집 경우 사업규모가 상당히 작고 인원 역시 많이 부족한 상태, 시립영등포근로자합숙소는 종교적 성격보다는 공공기관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일자리 제공은 공공근로, 일용직, 구직신청자에 대한 공공고용안정조직과의 연계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약 200명 규모의 실업대책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공공근로가 140명을 차지했다. 용산 보현의 집이 실직노숙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면 영등포 보현의 집은 일정 정도 자활지원사업으로 그 사업범위를 확장해 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독교장로회에서 주관하는 내일을 여는 집은 실직노숙자 및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이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주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특이한 점은 서대문구청에서 1명의 직원을 파견 받아 상근인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조직은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성북 및 노원 고용안정센터를 제외하고는 실직자 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공회의 고용안정센터는 이전부터 지역차원에서 전개한 빈민운동의 연장선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다른 종교단체의 실업자지원센터에 비해 다양화되어 있다.

5. 사용자 단체의 취업알선센터

사용자단체와 관련이 있는 취업알선센터는 별다른 노동시장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이 없이 구인과 구직의 연계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고 있다. 실태 조사된 6개소 중에서(자세한 내용은 <실태표 21~26> 참조)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취업알선센터는 중소기업이 주된 구인업체이면서 전 직종 및 업종을 망라하여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건설협회의 취업알선센터에서는 건설관련 구인과 구직의 연결로 특화 되어 있다. 사용자단체가 주관하는 취업알선센터는 노동조합, 민간사회단체 또는 공공고용안정조직과의 연계가 거의 없이 구인, 구직의 연결에만 집중하여 운영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인천경영자협회의 경우 지역 노동청의 인력은행, 대학교, 일하는 여성의 집 등이 참여하는 고용정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이다.

또한 기능이 매우 단순한 구인, 구직의 연결에 한정되어 구직자에 대한 상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구인업체가 중소 내지 영세업체로 저연령, 고학력 구직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사용자 주관 취업알선센터를 통해 취업이 가능한 실업자 층은 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업과 관련된 취업알선센터도 건설일용직의 경우 특수한 고용형태로 인해 안정적인 취업의 기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의 필요가 구인, 구직의 연결을 결정짓는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표 12> 사용자단체에서 운영하는 취업알선센터의 특징

단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상공회의소 - 인천경영자협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건설기술인협회 - 대한건설기계협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단체성격	- 무료직업소개업무 수행
주대상집단	- 구직자, 구인업체(위의 세 단체는 중소기업, 그리고 전 직종을 다루고 있으나, 사무직 구인-구직 연결이 대부분이다. 아래의 세 단체는 건설관련 구인만을 다룬다.
주요업무	- 구인-구직 연결
재 원	- 자체적으로 운영
상근인원	- 2~4명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거의 연계가 없는 편, 인천경영자협회 경우 지역 내 노동청 인력은행, 대학교, 일하는 여성의 집 등이 참여하는 고용정보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실업대책사 업 위탁	- 해당사항 없음
특기사항	- 구직자에 대한 상담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건설 관련 무료직업소개소들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구인업체들을 상대하고 있지만, 구인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체이고, 낮은 연령 대, 고학력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실업인구를 흡수하기는 어렵다. 구직자들의 사용자단체의 무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상 역시 마찬가지로여서 이들이 주로 다루는 직종들(사무관리, 영업관리, 경리 등 사무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구직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6. 시민사회 연합단체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센터

1998년의 대량실업은 실업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실업극복국민운동의 형태로 표출된 지역별 및 전국단위의 시민 사회단체 연합체의 생성은 대량실업사태의 해소를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는 민간단체들의 판단에 의거한 자발적인 실업극복노력, 나아가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대량실업과 이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공동체적 해결책의 모색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지역 시민단체 협의체(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¹⁾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²⁾ 성남시민실업극복국민

-
- 1) 참가단체는 부천교육청, 부천지방노동사무소, 부천시의회, 기독교연합회/불교연합회, 천주교연합회, 부천시의사회, 부천시한의사회, 부천시약사회, 부천시치과의사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부천대학, 부천상공회의소, 여성기업인협의회, 담배인삼공사부천시지부, 농협부천시지부, 오정농협, 부천축협,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천시민내일신문, 부천신문, 부천자치신문, 부천포커스, 중동신문, 드림시티케이블방송, 한국예총부천시지부, 미술협회부천시지부, 부천문화원, 복사골마당, 국악사랑회, 부천노총, 부천건설일용노동조합, 민주평통자문회의부천시협의회, 새마을운동부천시지회, 자유총연맹부천시지부, 바르게살기운동부천시협의회,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 부천주거연합, 부천시민연합, 부천경실련, 한국청년연맹부천시지부, 부천교육연대, 청년회의소,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부천가정법률상담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일하는여성의집, 부천생활협동조합, 부천시민센터, 부천사회복지협의회, 부천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부천시지회, 부천민간보육시설연합회, 새롭공부방, 자원봉사센터이다.
 - 2) 참가단체는 인천기독교실업대책위원회, 조계종인천사암연합회,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변호

운동본부,³⁾ <실태표 27~29> 참조)를 실태 조사하였다.

조사된 연합체들은 해당지역 안의 다양한 민간단체를 포함하는 협의체의 성격을 띠는데, 시민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정부행정부서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리

사인권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인천지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인천지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회, 인하대민주교수협의회, 인천대민주교수협의회, 다산건설, 목요회, 송림동나눔의집, 인천사회교육센터, 인천YMCA, 인천YWCA, 인천여성사랑모임, 여성실업대책인천본부, 인천여성의전화, 민족예술인총연합회인천지회,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가톨릭환경연구소, 경실련인천지부, 남동시민모임, 노동자문화운동마루치),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가톨릭청년연대, 노동자의집,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부평노동사목, 인천기독교노동자모임, 인천부천총학생회연합, 전교조인천지부, 통일을여는민주노동자회, 현장문예단좋은세상), 부평시민모임, 새날청년회, 연수시민모임, 우리밀살리기운동인천지역본부, 인천노동정치연합, 인천노동청년연대, 부평노동청년회,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생태연구소,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민중연합, 인천산업사회연구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을사랑하는일하는사람들의모임, 인천지역노동상담연구단체협의회(인천노동법률상담소, 인천노동선교문화원, 인천노동연구원,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인천시민연합, 청량산살리기시민모임, 청솔의집,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한겨레노동자회관, 한국노총인천본부연합주택조합이다.

- 3) 참여단체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원대학교수협의회, 까치골예술사랑회, 내일을여는집, 모란상인회, 민간보육시설연합회성남지부, 민주노총경기동부지구협의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살기좋은성남만들기시민본부, 성남불교사암연합회, 성남상공회의소, 성남불교신도회, 성공회성남성당, 성남문화센터, 성남시기독교연합회, 성남시사회복지단체협의회, 성남시민모임, 성남시약사회,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주민생활협동조합, 성남문화연구소, 성남분당소비자생산협동조합, 성남시의사회, 성남치과의사회, 성남한의사회, 성남YMCA, 성남YWCA, 성남지체장애인협회, 성남참사랑복지회, 원불교성남교당, 음식나눔은행, 한국청년연합회성남지부, 한국노총성남지역지부, 한국예총성남지부이다.

한 다양한 단체의 참여는 지역별 실업대책 방향에 대한 여론조성과 압력의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 본부의 상근자들이 구체적 사업을 주관해나가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시민 사회운동단체에서 과거의 지역, 노동, 청년 운동 등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대부분의 사업 내용을 주도하고 각 참여단체는 필요할 경우 사업협조와 민-관 네트워크의 통로로 기능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된 세 본부 모두 해당 지역의 실업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실업극복국민운동 결연 사업, 희망의 카드사업, 공공근로 위탁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취업알선사업, 자활지원 사업을 펴면서 정책사업으로 모니터링이나 토론회들을 진행하여 활발하고 다양한 사업구도를 보여준다. 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도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사업비 외에 시의 보조금, 단체분담금, 지역성금 등을 통해 다양하게 형성되며 민간단체의 연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기존의 현장지식이 잘 수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의 경우 공공근로 위탁의 경험을 살려 오리농장을 생산자협동조합으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성남시민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생산자협동조합 형태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인천지역에 8개의 지부를 두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도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을 공공근로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생산자협동조합 형태로의 전환은 아직 고려되지 않고 있다.

민간단체 또는 공공고용안정조직과의 연계를 살펴보면 부천본부는 겨울나기 사업 등을 부천노동조합과 공공근로위탁과 관련해서는 부천건설일용노조와 협의를 하는 등 사안별로 노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협의체에서 노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른 민간고용안정조직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 연합체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사업에서도 공공고용안정조직과의 연계는 취업정보를 얻거나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정도의 매우 소극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의 경우 이 지역 실업대책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대부분 포괄하면서 관과의 장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지만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나 정보의 공유를 넘어서는 수준의 구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관서는 무료급식, 쉼터운영, 공공근로 위탁, 생활보호대상자선정 등을 담당하고 민간단체는 복지수요가 있는 사회 곳곳을 탐색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단위의 운동본부들은 초창기에는 결연 사업, 쌀 나누기 사업 같은 생계지원 등 다급한 복지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전력을 투구하다가 차츰 자활지원을 위한 협동조합사업, 장기적 공공근로 위탁 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시민단체 연합체의 장점은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각각의 통로를 통해 수렴하고 해당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상의 분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취업상담의 경험이 오랜 기관에서는 이 분야에 주력하고 협동조합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있는 단체에서는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각 지역별 자원을 동원하여 의료지원서비스를 조직해낼 수 있는 기관에서는 해당 분야를 전담해주는 식의 분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의 실업극복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용 및 실업구조에 대한 정보의 공유, 민·관이 동원가능한 재정적 자원의 규모, 인적 자원의 특성, 지역 고유의 실업대책 사업의 특화 등이 연합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3> 시민단체연합

단 체	-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 성남시민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단체성격	- 해당지역 내 다양한 민간단체를 포괄하는 협의체의 성격(시민단체,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정부행정부서 등)
주대상집단	- 해당 시의 실직자와 저소득층 주민
주요업무	① 실업극복국민운동 결연 사업 ② 공공근로 민간위탁 ③ 저소득층 지원사업 ④ 취업알선 사업 ⑤ 정책사업 ⑥ 자활사업 추진
재 원	-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사업비, 시의 보조금, 단체분담금, 지역성금 등
상근인원	- 10명 내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자원의 경우 과거 노동운동, 지역운동, 청년운동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자원들이 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대규모사업(겨울나기 사업 등)시 노조와 연계하나 일상적인 연계는 없는 상태,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경우 건설일용노조와 공공근로 위탁에 있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체가 민간단체들을 포괄하고 있는 성격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취업알선에 있어서는 구직자들을 연결시키기는 하지만 업무 연계나 정보공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시에서 주관하는 특정사업에 있어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정도, 계속해서 관과의 연계심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
실업대책 사업위탁	- 보도블럭깔기사업,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등의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 수행, 자신들의 아이টে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남본부의 경우 생산자협동조합을 구성한 상태
특기사항	- 취업알선에서는 민간단체와 관과의 연계가 거의 없는 편이지만, 기타 실업대책 사업에 있어서는 관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포괄하는 단체가 많고, 사업의 규모도 크다. 관의 행정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7. 지역운동에 기반한 고용안정센터

지역운동 차원에서 형성된 고용안정조직들은 시민단체 연합체처럼 지역의 모든 단체를 망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운동을 벌이던 한 두 단체가 주축이 되어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민간고용안정사업을 벌인다는 점에서 앞의 시민단체 연합과는 성격이 다르다. 대량실업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지역에서 활동하던 여러 단체들의 연계형식으로 구성되며 과거 빈민운동, 지역운동을 하던 다양한 운동조직의 비교적 동질적인 업무능력을 가진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센터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사업수행능력이 높고 지역기반도 잘 확보되어 있는데다가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매우 좋은 편이다. 실태조사에서는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의 3개 지부와 관악주민연대, 경기동부대책위원회를 조사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실태표 30~34> 참조).

이들 센터도 다른 대부분의 민간고용안정조직과 마찬가지로 지역 저소득층 주민, 임시직 및 일용직이 주종을 이루는 지역 실업자를 주대상집단으로 삼고 있다. 실업극복국민운동 계열 사업에서 시작하여, 공공근로 위탁, 취업알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공부방, 그 외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등으로 사업이 다양화되어 있고 다른 단체와의 연대사업도 눈에 띈다.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의 경우 서울지역실업자단체연대(서실연), 전국실업연대, 민주노총의 실업자종합지원센터와 연계가 있으며, 성공회 나눔의 집에서 설립한 성북고용안정센터, 노원고용지원센터와도 공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관악주민연대는 지역의 놀이방, 공부방 등 다양한 지역 센터들이 지역연대를 결성하여

이루어진 지역주민연대이다. 고용안정과 실업자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동부대책위는 용인청년일꾼들, 성남청년회 등에서 활동하던 지역운동가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건설일용노조, 상대원지역 실업자노조, 여성노조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다.

지역운동 차원에서 형성된 고용안정조직도 실업극복 국민운동 결연 사업과 취업알선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고용안정 및 자활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울북부 실업자사업단 성부지부의 경우 음식물찌꺼기재활용사업을 서울시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위탁받아 총 64명이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서 제안한 사랑의 시래기나누기운동을 펼침으로써 관 주도 및 민간 주도 실업극복운동을 모두 결합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하철소파청소, 초·중·고 형광등청소, 일일 공공근로, 수해복구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근로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노원지부에서도 나눔건설일용노동자공동체, 음식물찌꺼기재활용, 생명의 숲가꾸기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간병인 사업, 폐컴퓨터 완전해체를 통한 재활용, 수해복구 등을 공공근로 위탁, 자활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제안 사업 등의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강북지부의 사업도 위의 두 지부와 유사하다. 아울러 지역의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책사업으로 실업자신문을 발행,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역운동차원의 고용안정사업은 공공근로 위탁 이외에는 공공고용안정조직과의 연계가 없는 편이다. 이는 구청이나 인력은행으로 구직자를 연결시키고는 있지만 이들에게 알맞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체적인 자활지원사업이 일자리 제공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편이다. 반면 실직가정결연 사업에 대한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지원 및 그 외 제안사업을 활

발히 펼치고 자체개발사업을 생산협동조합 내지 신용협동조합 형식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은 강한 편이다.

<표 14> 지역운동으로 형성된 고용안정조직의 특성

단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북부 실업자사업단 노원지부 - 서울북부 실업자사업단 성북지부 - 서울북부 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 - 관악주민연대 - 경기동부대책위
단체성격	- 대규모실업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지역에서 활동하던 여러 단체들이 구성(주로 빈민운동, 지역운동), 다양한 센터의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력이 높고, 지역기반도 잘 확보한 상태,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단체와의 연계도 높은 상태
주대상집단	- 지역 저소득층 주민, 실직자(임시직, 일용직이 대부분을 차지)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실업극복국민운동 결연 사업 ② 공공근로 민간위탁 ③ 저소득층 지원사업 ④ 취업알선사업 ⑤ 정책사업 ⑥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사업 ⑦ 자활사업 추진
재 원	- 결연 사업의 경우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서 지원, 기타사업은 회원회비 및 지역후원금으로 충당
상근인원	- 상근인원은 3~5명 정도이나 지역 내에 여러 곳의 센터를 두고 있으며 각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진행중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서울북부 실업자사업단의 경우 서실련, 전국실업연대,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와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나눔의 집에서 설립한 성북고용안정센터, 노원고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관악주민연대의 경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센터들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동부대책위와 하남청년회는 해당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과 공동협의,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구직자를 보내도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 거의 없음
실업대책 사업위탁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을 수행 중, 음식물찌꺼기 재활용, 지하철 소파청소, 형광등 청소, 폐 컴퓨터 재활용, 숲가꾸기 등의 아이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제안사업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체적으로 개발한 아이템을 자활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상태(서울북부 실업자사업단 경우 나눔일용건설공동체, 들무새)
특기사항	- 이전부터 해당지역에서 계속 지역운동, 빈민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근자들이 해당지역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따라서 사업의 연속성,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른 민간단체들에 비해서 자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며, 생산 자협동조합 설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노동조합 및 기타 노동단체들과의 연계도 높은 편이다.

8.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1997년 말 기준으로 서울지역에만 85개소(한국복지연구원, 1999)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인한 지역사회 포괄적 복지사업의 담당기관이다. “각 시·군·구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사회문제 다발성 지역에 두어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통한 포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가정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보건복지부, 1997, 270)” 1982년 이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다. 1996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315개소가 건립되어 있었고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 227개소, 비영리법인이 80개소, 지방자치단체가 8개소로 나타났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사업 영역은 가정복지(가정문제 종합상담, 직업·부업기능 훈련, 취업·부업안내), 아동복지(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어린이 기능교실), 청소년복지(청소년상담 및 교양교육), 노인복지(노인 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불우노인결연), 장애인복지(재활서비스 알선 및 이송), 지역복지(주민교육, 자원봉사자의 양성 및 활용 후원자개발, 사회조사, 시설제공사업 등)로 매우 방대하다(보건 복지부, 1997, 271-272).

실태조사는 서울지역의 7개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운영주체는 까리타스 수녀원, 사회복지법인 한국여성복지연합회, 사랑의 전화, 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회,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등으로 다양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실태표 35~41> 참조). 조사된 사회복지관들은 기존의 재가복지, 일반적 직업교육,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 지원사업에 더하여 대량실업사태 이후 무료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일부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숙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쉼터)을 수행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은평복지관의 경우 자활지원사업을 펴고 있으며 사랑의 전화는 조사기관 중 유일하게 대상집단이 광역화되어 찾아오는 사람이 서울·경기 지역에 포괄적으로 퍼져 있었다.

직업훈련과 관련된 특징으로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컴퓨터기능, 조리기술, 미용기술 등의 직업훈련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었으며 사랑의 전화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텔레마케터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었다.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은 재취업훈련의 성격이 적고 지역주민들이 취미교육으로 활용하는 편이었다.

취업알선이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관의 중요 사업내용으로 등장하여 대부분 무료직업소개소 허가를 받은 취업정보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구직자에 대한 심층상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구인처의 확보도 미흡한 상태였다. 또한 공공 고용안정조직과의 관계도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대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전달하는 정도 이외에는 별다른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대책 위탁 수행은 직업훈련의 훈련비 지원 차원의 것이며 자체적인 자활 지원사업이나 공공근로 위탁사업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은평복지관만 자체적 자활사업 추진 중).

사회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고용안정사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적 조건과 고정적 상근인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 연합이나 지역운동 또는 다른 민간 고용안정조직에 비해 다양성 면에서나 사업의 창의성 면에서 뒤지는 것은 정부 지원과 관리를 받으면서 준공공기관적 성격을 띠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주민의 실태와 복지수요에 따른 자체적인 고용안정사업을 수행한다기보다는 사회복지관의 일반적 업무 틀과 행정구역의 테두리에 묶여있고 지역단위의 다른 민간단체와의 연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15> 사회복지관

단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초종합사회복지관 - 방배종합사회복지관 - 사랑의 전화 - 북부종합사회복지관 - 은평종합사회복지관 - 중계종합사회복지관 -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단체성격	-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지역종합사회복지관, 실업대책사업 이외에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주대상집단	- 주로 지역주민 및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함.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일용직, 임시직 고용구조를 가진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실업대책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랑의 전화 경우 서울, 경인지역을 포괄하는 대규모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남현, 사당, 방배동 지역은 빈부 차가 심한 지역이라 파출업 등 일용직 노동자들의 분포가 높다
주요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부분 무료직업소개소 허가를 받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 중, 구직자에 대한 심층상담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구인처의 확보도 미흡한 상태 ②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관에서 교육비를 지원 받는다. 일반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업과 긴밀하게 연결된 교육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랑의 전화는 대규모로 텔레마케터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③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중이다(2000년부터 진행 예정), 물세탁, 제과제빵, 한과 등의 아이템 ④ 재가복지, 공부방운영,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복지관의 업무 수행. 까리타스 방배복지관의 경우 쉼터 및 사랑의 식당 운영, 이동목욕, 반찬배달 등 복지서비스 제공
재 원	- 보건복지부지원금과 사회복지법인의 재원(재단전입금)으로 운영. 그 외 유료프로그램 운영비 및 구비 지원 받는 경우도 있음

상근인원	- 취업정보센터의 경우 1~3명 정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다. 방배 및 서초 사회복지관의 경우 30명 정도,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자원봉사자들로 구성 보수 : 100만원 이상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구직신청,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을 안내하는 정도, 취업알선 업무에 있어서 정보공유와 업무연계는 미약하다.
실업대책 사업위탁	- 관의 직업훈련 교육비 지원 이외에는 없음,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정부와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 사업을 공모했으나 채택되지 못해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기사항	-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공공단체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자체적인 실업대책 사업의 진행이 어렵고, 행정구역의 테두리에 묶여 있으며, 다른 민간단체와의 연계는 거의 없다. 방배 및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지역주민 대상의 재가복지 및 여성취업훈련, 무료직업소개가 주업무, 방배사회복지관은 노숙자 쉼터 운영, 무료 사랑의 식당 운영. 교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으나 일반인에게 인지도 낮은 편. 복지관의 취업교육은 직접적인 취업보다는 저렴하게 생활교양을 익히려는 지역주민 참여가 많은 편

9. 재야운동단체에서 주관하는 고용안정조직

실태조사에서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고용안정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 단체를 좀 더 세분화시키려는 노력이 불가피했다. 사회운동단체 중에서도 열린사회시민회는 서울민주시민연합(전 민청련)과 서울지역겨레사랑지역운동연합(전 서울국본)이

1998년 통합 구성된 것으로 기존의 재야운동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재야운동단체에서 주관하는 고용안정조직으로 별도로 분류하였다.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와 열린사회동대문중랑시민회의 두 곳을 실태 조사하였으며(자세한 내용은 <실태표 42~43> 참조) 이들은 서울에 있는 열린사회시민회 10개 지부의 일부로 본부는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 두고 있다.

주대상집단은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과 실업자이며 전직이 건설일용 내지 일반일용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모자가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가정 결연 사업(결식아동지원, 방과후 학교 등)에서부터 의료지원 사업, 음식물재활용사업(강서 양천), 직업상담 이후 공공고용안정조직으로 연결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사업 재원은 회비, 지역성금(후원회비), 공모사업 경비,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지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나 다른 민간단체와의 연계가 별로 없고 서울실업자단체연대에만 가입되어 있으며, 공공고용안정조직과는 공공근로 위탁에 대한 협의를 한다거나 구인정보를 구하는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운동기반이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운동단체에 비해 사업추진 및 구성력은 뒤지지만 서울 전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상근자 및 회원들도 재야운동 출신으로 결합력이 높은 편이다. 지부별로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음식물쓰레기재활용)은 공공근로 위탁이 아니라 순수한 민간차원의 자활사업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16> 재야운동단체

단 체	- 열린사회동대문중랑시민회 -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
단체성격	- 재야운동을 하고있던 서울민주시민연합(전 서울민청련)과 서울지역겨레사랑지역운동연합(전 서울국본)이 1998년 통합 구성,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 본부가 있으며, 서울에 10개 지부를 가지고 있다.
주대상집단	- 지역 저소득층 주민 및 실직자(임시직, 일용직 다수)
주요업무	① 실업극복국민운동 결연사업 ② 의료지원사업 ③ 취업알선(관내 노동청 및 구청 취업정보센터와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안내하는 정도) ④ 방과후 학교 ⑤ 강서양천시민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자활사업 추진 중(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재 원	- 결연 사업 경우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서 지원, 나머지는 회원회비 및 지역후원금으로 충당
상근인원	- 강서양천시민회 14명, 동대문중랑시민회 5명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독자적으로 사업전개, 서실련에 참여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구직자를 관내 취업정보센터로 안내하고 있으나 관의 정보가 적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업무연계나 정보공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실업대책 사업위탁	- 해당사항 없음
특기사항	- 지역운동기반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비해서 사업력은 떨어지지만 서울 전지역에 걸치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상근자 및 회원들의 결합도도 높은 상태, 강서양천시민회 및 북부시민회에서는 자활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민간위탁의 형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 장애인을 위한 취업알선센터

장애인은 그 특수한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인해 별도의 노동시장정책의 대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시장에서 지원은커녕 차별을 받기 쉬운 집단이다. 한국의 장애인 관련 고용안정사업은 지금까지 복지차원에서 밖에는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노동조합의 정책제언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이다.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관련 취업알선센터 2개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들의 기능은 구인과 구직을 연결하는 무료직업소개소에 한정되어 있었다. 민간단체와의 연계도 없고 별도의 실업대책을 위탁한 경험도 없으며 직업훈련이나 별도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연결시켜주는 정도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17> 장애인을 위한 취업알선센터

단 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단체성격	무료직업소개소
주대상집단	장애인
주요업무	구인·구직 연결
재원	자체적으로 운영
상근인원	3명 정도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필요시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결
실업대책 사업위탁	해당사항 없음

VI. 향후 발전방향

경제위기 이후 생활이 더욱 열악해진 도시 저소득층은 대부분 일용직, 단순노무직 등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를 갖고 있으며 연령 면에서도 중고령 층이 대부분이고, 학력도 낮은 편이다(이장원 외, 1999). 이들은 노동시장의 수요가 위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공고용안정조직을 통한 재취업이나 노동시장프로그램 적용이 난이하고 실업 및 소득빈곤 관련 사회안전망의 적용도 매우 어렵다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갖고 있다. 소득보전과 관련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의 실업은 빈곤함정으로 직결되며 마땅한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실업함정을 탈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빈곤과 실업 사이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정부는 그간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임시방편을 취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이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낙관론을 펴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및 소극적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노출되면서 대량실업사태 이후 다양한 민간고용안정조직들이 지역 및 대상집단별 고용안정조직의 형성이 줄을 이었다.

본 실태조사에서는 서울·경기지역의 민간고용안정조직을 열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3~4년의 경험을 축적한 자활지원센터들은 지역기반 위에서 독자적인 자활지원사업을 펴는 데에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운영주체의 차이가 독자적인 사업 내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조직으로 1998~99년 사이에 대폭

확충된 일하는 여성의 집은 공공고용안정조직에서 불충분한 여성관련 고용안정서비스를 전달하는 고용안정조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노동조합이 주관하여 운영하는 고용안정조직은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방안과 연계되어 노동조합의 관심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한국노총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제안이(권혜자, 박선영, 1999)있었지만 평화의 집을 실업쉼터로 제공하는 이 외에는 별다른 고용안정사업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경제위기 이후 노동조합이 고용안정사업에 갖는 관심은 실업자의 조직화사업이라는 맥락에서 생겨났지만 현실적으로는 고용안정사업에 충실하기도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건설일용직 노조의 경우 이 직종의 특수한 고용구조를 고려하여 구인, 구직의 연결과 일거리가 없는 시기의 대체일거리제공(공공근로)을 연결시키려 시도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고용안정조직이 다른 민간단체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면서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개척하려 할 때 건설일용노조의 예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용자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센터는 문자 그대로 구인 및 구직의 연결에 그 기능이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취업알선도 다른 민간고용안정조직과는 달리 정규직을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자활지원센터류의 서비스를 이러한 조직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용자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조직은 정규직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인·구직의 연결을 체계화하여 공공고용안정조직을 보완하고 직업훈련 기능이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종교단체에서 주관하는 민간고용안정조직이나 사회복지관은 비영리단체에서 실업자의 복지문제로 최근 관심을 확대하여 일

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특징적인 자활지원사업이 개발되지 않는 한 복지 차원의 지원사업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구인·구직의 연결 또는 유료 직업훈련 프로그램인데 후자는 재취업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취미교양교육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고용안정조직 중 기존의 자활지원센터 경험과 지역기반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자활지원센터와 유사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역운동에 기반을 둔 고용안정조직은 지역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기존 운동기반에 의한 접근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자활지원센터에 뒤지지 않는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 분야에는 진보적인 시민 사회단체나 노동조합과의 깊은 연계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어차피 향후 자활지원사업이 지역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지역조직들도 이러한 연계를 적극 활용하거나 사업형태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연합단체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사업은 표면적으로는 지역의 거의 모든 사회단체의 이름이 참여단체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은 노동운동, 지역운동, 빈민운동 및 청년운동 등 출신 활동가들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다. 지역사회협의체에 시민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문화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인단체, 정부행정부서 등이 총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행정부처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관 네트워크 형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공공고용안정조직과 민간고용안정조직 사이의 협력체계가 어떤 형태로 정착되어갈 것인지에 대한 지역 차원의 사회적 협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될 것이다.

민간고용안정조직이 갖는 의미는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자활지원사업의 일부를 민간에서 수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유형의 민간고용안정조직들이 모두 자활지원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일부는 이미 기존의 자활지원센터 수준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또 일부는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를 곧이 자활지원센터의 형태로 바꿀 필요 없이 현재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다.

향후 민간고용안정조직의 발전방향은 우선적으로 공공고용안정조직의 정착과 확충 및 민간과 공유 가능한 고용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을 전제로 하여 결정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근로,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경제위기로 인한 한시적인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지속성을 갖는 고용정책의 영역으로 정착되어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실업자 및 실직 위험에 처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대상집단별로 다원화하고 이를 공공고용안정조직에서 적극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해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업대책 관련 6대 DB(구직등록, 실업급여, 직업훈련, 공공근로, 실업자대부, 생활보호대상자)를 구축하고 이들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정확한 개인별 정보에 근거한 구인·구직의 연결 및 재취업율의 제고, 즉각적인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노동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적용은 대상집단별로 민간 및 공공고용안정조직이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고용안정조직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로는 이들 단체를 찾는 실업자 또는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현재 공공고용안정조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노동시장에의 안정적 진입과 정착이 어려운 집단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고용안정조직의 지역별, 대상집단별, 사업유형별 특성을 평가하고 지역고용정책 차원에서 이들을 고려하여 사업배분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효율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1998년 이후 진행되어 온 민·관 협력 사업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의 위탁형태이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민·관 협력 사업은 민간부문의 역량 활용 및 사업의 다양성,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때 민간단체는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는 법인, 협회, 조합 등 공식 조직형태를 갖춘 민간단체로 규정되며 99년 8월 현재 사업 위탁은 105개 단체에 총 62조 1500만원 수준으로 인력지원은 총 1,541개 단체에 8,028명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이재관, 1999).

<표 18>은 민간단체에 위탁된 대표적인 공공근로사업을 보여주는데 사업내용에 따라 장기적 고용창출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는 영역들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사회복지도우미 형태(저소득아동생활지도, 여성복지 도우미, 방문간호, 경증장애인 도우미 등)는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아서 공공근로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와의 협력 속에 장기적인 사회복지인력으로의 적극적인 전환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정화, 숲가꾸기, 쓰레기재활용 등은 건설일용, 단순노무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차원에서 민간고용안정조직이 주로 위탁받는 공공근로의 형태로 일하는 자활지원사업으로 정착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표 18>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73개 공공근로사업 중 민간단체의 사업참여 형태를 취하는 대표적 사업(1999. 7.)

사업명	참여단체	사업예산 (백만원)	투입인 원 (명)	사업기간
저소득 아동 생활지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4,988	820	1. 11 ~ 12. 10
여성복지 도우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6,917	3,685	1. 11 ~ 12. 12
방문간호사업	방문간호사업단 (5개 대학 협의체)	12,802	2,308	2. 4 ~ 12. 31
생활용품 재활용	한국부인회, YWCA	6,000	855	1. 11 ~ 12. 10
가정해체 예방상담	한국여성민우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162	373	1. 11 ~ 12. 10
저소득층 자활 및 창업지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662	367	7. 1 ~ 12. 31
경증장애인 도우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 회	697	346	7. 12 ~ 10. 25
숲가꾸기 사업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 운동	4,591	500	1. 11 ~ 12. 31

자료 : 이재관, 1999

실제로 1999년의 공공근로사업에서는 민간에의 위탁이 증가하여 3단계사업에 이르러서는 총 78개 단체에서 44억 여원 규모의 공공근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표 19> 자치단체 시행사업

유형	총계	1단계사업	2단계사업	3단계사업
사업위탁	105개 단체	1	26	78
	6,215백만원	7	1,784	4,425
인력지원	1,541개 단체	365	524	652
	8,028명	2,027	2,920	3,081

출처: 이재관, 1999

둘째, 정부가 고용안정사업의 기능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또 다른 방식은 사업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있다. 예컨대 자활지원센터처럼 그 운영체계가 이미 정착되어 있는 민간단체에 사업재원을 제공하고 사업은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은 대부분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999년의 경우 1500여 개 단체에서 약 8000여 명에 해당하는 인력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셋째, 민·관 협력사업의 또 다른 예는 민간단체에 직업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특별한 훈련종목을 개발하지 않는 한 민간고용안정조직은 전문적 직업훈련기관에 비해 사업능력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민간 고용안정조직은 공공고용안정조직과 달리 취업가능성이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집단에 적절한 훈련종목을 개발하고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 일부 직업훈련기능의 민간위탁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의 직업훈련 사업 운영에서 그 책임을 절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고용안정조직이라고 보인다. 현재 주로 구인·구직의 연결이라는 단순한 고용안정사업에 사업내용이 한정되어 있음이 실태조사결과 밝혀졌는데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한 훈련분야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민간에 위탁된 직업훈련이 단순히 훈련비 수령을 위한 형식적 사업에 머물지 않도록 재취업률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사업위탁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고용안정조직에 대해 노동조합이 갖는 관심은 고용정책의 수행기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실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소득보전의 체계가 정비되고 정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일하기를 원하는 노동자라면 일자리를 제공받고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취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안정사업이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인과 구직의 연결이라는 좁은 범위를 벗어나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노동자의 취업경력에 대한 동반자적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에 고용안정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구인과 구직의 연결도 미흡할 뿐 아니라 경제위기를 맞고서야 비로소 그 중요성이 어느 정도 인식되기 시작한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체계적 적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이 비영리 고용안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은 각 주관단체별로 구체적인 동기는 다를지라도 근본적으로는 현재 고용 및 실업정책이 갖고 있는 허점에 대한 공통적 인식에 기반한 민간의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일정 정도 실업대책의 민·관 협력 활성화를 수용한 이유도 현재 여건상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집단별로 실업대책을 특화 시켜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을 인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과 분업의 정착이 공공기관의 책임을 민간으로 이양시키는 방식으로 굳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민간과 공공 고용안정조직 사이의 연계 강화를 통해 구직자의 노동능력 단계별 세부 프로그램들을 개발 정착 시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고용정책의 연계는 이미 시민단체연합체가 주관하는 지역별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조직형태를 참조하여 지역별로 ‘고용정책협의회(가칭)’를 구

성하고 이를 노·사·정·민간의 협의에 의한 고용정책의 구상 및 시행의 주체로 정착시켜간다면 바람직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Ⅶ. 서울 경기지역 민간 고용안정조직 실태조사 결과 - 단체별 현황

1. 자활지원센터

<실태표-1> 관악자활지원센터

	내 용
설립연도 및 운영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 - 대한 성공회 관악자활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관할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지원사업 봉제협동조합(생활한복 하청), 개보수 공사 위주의 건설협동조합(관급공사 수행), 청소용역 협동조합(플 무원의 냉온수기 청소, 터널청소) - 노숙자 자활 프로젝트로 보건복지부로부터 2억5천 만원 지원 받음 : 재활용센터, 나눔물산 봉제협동조 합 제2공장 신설, 도시락 사업단 창업), 20% 노숙자 고용목표로 - 융자금 알선 등
정부실업대책 위탁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취로 사업 : 학교 청소대행, 공동부업장(현옷수 집, 비누 재활용), 일당2만원, 3개월, - 민간공공근로 : 세대주 위주 시래기 판매, 일당 2만 2천원, 무료급식소 지원

고용유지 및 창출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물산 봉제협동조합 : 10명 조합원(1인 100만원 조합비), 20명 임노동자 조합원의 경우 1달 수입 80~90만원, 비조합원 70~80만원정도 - 건설 및 청소 용역의 경우 : 부정기적인 수입으로 다른 일을 해야함.
상근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 - 지역운동가, 시민운동가 출신 - 보수 : 60~80만원 정도 - 협동조합론 등의 교육지원
재원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시비+ 구비 = 총 9천만원+3천만원(청소 년교실 운영비)
지역고용 구조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일용직 노동자 중심 - 파출, 식당종업원 등의 비정규 노동자 중심
대상집단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을 가져보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 - 유동성이 많은 직업들 - 난곡, 봉천 등 빈민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들도 다수 포함
노조 및 지방관서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와의 연계 약함 - 관악지역주민연대와 유기적 관계 - 구와의 관계 긴밀

<실태표-2> 마포자활지원센터

	내 용
설립연도 및 운영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 5. - 학교법인 이화학당 <마포 자활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관할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 지원사업, 생산자 협동조합 형태 - 아름다운 세탁나라, 봉제협동조합, 인테리어조합, 의식산업창업단, 간병인조합, 시설관리 창업단, 협동농업창업단 - 취업알선 - 생업자금융자알선
정부실업대책위탁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취로 사업 : 일당 2만원
고용유지 및 창출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세탁나라 : 연간 매출액 1억5천, 순이익 매출의 10%, 조합원 3명, 총직원 10명, 1인당월급 70~100만원선
상근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9명 - 80~100만원정도
재원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시비+구비 = 9천6백만원 - 청소년교실 운영 : 3천만원정도
지역고용 구조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산동 임대아파트 지역 - 출근을 위하여 멀리로 이동
대상집단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번도 정규직에 종사해보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 - 파출, 식당 등 일용직 - 생보자 다수
노조 및 지방관서와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가 관리 감독 : 특별취로 사업 등 - 노조와의 연계 없음

<실태표-3> 광명 자활지원센터

	내 용
설립연도 및 운영주체	- 1997. 7. 설립. 보건복지부 관할 - 사회복지 법인, 한국복지재단 광명 자활지원센터
업무내용	- 직업알선 : 용역업 위주. 가사도우미, 간병인, 파출. - 공동부업장 : 장애인 2명이 구도 본드작업 하청. 경기를 타기 때문에 항상 수입이 일정하지는 않음. - 도배사업단 : 가장 안정적인 사업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세차사업단, 재활용사업단, 간병인 사업단 : 1998. 9. 시작 16명 병원홍보로 사업 진행. 1억1천8백 지원 받음 - 청소년 교실 : 공부방, 영화사랑방, 캠프 - 고령자 자활 : 손두부(콘테이너 등을 빌려서 했으나, 민원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 관청에서 매우 성가신 존재로 낙인됨)
정부실업대책 위탁여부	- 노동부 <산업인력 관리공단>간병인 교육 51명 중 38명 취업 - 특별취로 사업 : 일당 2만원, 4개월 동안
고용유지 및 창출효과	- 도배사업단의 경우 안정적인 자활업체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눈에 띄는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활공동체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상근인원	- 사회복지사 9명 - 80 ~ 100만원정도
재원조달	- 보건복지부+ 시비+ 구비 = 9천 6백 만원 - 청소년교실 운영 : 3천만원정도
지역고용 구조의 특성	- 임대 아파트 주민들. 일용잡부, 행상.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분들 대부분 - 소비의 공간으로 광명시 인지.서비스업위주
대상집단의 특성	- 일용잡부, 행상.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분들 대부분
노조 및 지방관서와의 연계	- 노조와의 관계없음 - 자활사업의 공사에 대한 우선권을 얻기 위하여 관공서와의 관계 중요

<실태표-4> 성남자활지원센터

	내 용
설립연도 및 운영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 7. - 참사랑 복지회 <성남 자활지원센터> - 보건복지부관할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락 공장 : 사업자등록 및 위생업 등록 등 사업 건설팅. 자본금 용자에 대한 추천권과 용자 알선. 생산자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준비. 협동조합론에 대한 교육. - 부업장 : 인형, 전자제품 하청 - 직업알선 : '주'로 하지는 않는다.
정부실업대책 위탁여부	- 없음
고용유지 및 창출효과	- 도시락공장의 경우 자활업체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음
상근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 - 보수 : 60 ~ 80만원선 - 빈민운동가, 사회복지사 공채로 모집
재원조달	- 보건복지부에서 9천+ 추가지원(시비, 구비). 기초자치단체에서 건물임대 및 세금공제혜택.
지역고용 구조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민, 생보자들이 많음. - 일용직 건설노동자들 및 과출업, 식당업 등의 여성 노동자들 대부분 - 자활에의 의지가 강하지만 현실적으로 자활교육을 받은 이들 모두 조합원이 되지는 않는다.
대상집단의 특성	-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조 및 지방관서와의 연계	- 시비 및 구비 등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관계유지가 중요. 그러나 현재 그다지 유기적인 관계는 아니다.

2. 여성 대상 민간 고용안정조직 : 일하는 여성의 집

<실태표-5> 강서 일하는 여성의 집

	내 용
설립연도 및 운영주체	- 1996. - 여성자원금고 <강서 일하는 여성의 집> - 노동부 관할
업무내용	- 직종개발 : 텔레마케팅, 만화전문가반, 의료 리폼사 반, 조화기능사반 등등 - 훈련생들 취업알선
정부실업대책 위탁여부	- 여성실직가장훈련 - 실직자 재취업 과정
고용유지 및 창출효과	- 텔레마케터의 경우 100% 취업 - 유료프로그램들 취업률 모두 높음 : 교육을 취업으로 연결시킨다.
상근인원	- 21명 - 장애어린이 탁아소, 영어 탁아소 등 : 자원자 - 직원들 모두 자원금고 교육생출신
재원조달	- 노동부 및 유료프로그램 운영 - 1년 예산 8억
지역고용 구조의 특성	- 강서 지역 중간층 및 그 이하 주거지역
대상집단의 특성	- 전문직진출을 원하는 30~40대 여성들 - 여성자원금고 시절의 유명세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수강하기 위하여 온다. - 직업상담사, 사회보험사 등 전문 자격증이 있는 전문직 운영
노조 및 지방관서와의 연계	- 노조와 관계없음 - 서부여성발전 센터 위탁 운영 - 지방노동청과 정보교환 - 독자적으로 취업사업운영

<실태표-6> 구로 일하는 여성의 집

	내 용
설립연도 및 운영주체	- 1998. 9. - 서울여성노동자회 <구로 일하는 여성의 집> - 노동부 관할
업무내용	- 직업교육 및 취업 상담, 직업알선 - 정부 실업대책 사업 수행
정부실업대책 위탁여부	- 실직 여성가장을 위한 프로그램 - 실업자 재취직 훈련 - 고용촉진 프로그램 - 실업극복 운동본부 지원
고용유지 및 창출효과	- 취업률 30% 정도 - 교육으로 창업 및 취업의 비율은 높지 않다.
상근인원	- 6명 - 60~70만원정도 - 서울여성노동자회출신들 및 전직 노동운동가들로 구성
재원조달	- 노동부 지원 및 운영프로그램에서 수익으로 재원조달
지역고용 구조의 특성	- 공단지역이므로 생산직 노동자들이 주를 이룸 - 여성들의 경우 취업을 해야 생계유지가 가능 - 비정규직에 고용되어 있어 이직률이 높음(보험, 학습지 교사, 식당종업원 등) - 중장년층 실업문제 시급
대상집단의 특성	- 생계에의 필요성으로 취업의 욕구가 높음.
노조 및 지방관서와의 연계	- 서울여성노동자회 및 서울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의 하위 조직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구로구청, 지방노동청과 취업정보 교환

<실태표-7> 동작 일하는 여성의 집

	내 용
설립연도 및 운영주체	- 1998. 3. - 주부클럽연합회 <동작 일하는 여성의 집> - 노동부관할
업무내용	- 유료강좌를 통한 직업교육 - 직업교육을 취업으로 연결 : 무료직업소개소 - 결식아동돕기 바자회 - 무료 컴퓨터 교육
정부실업대책 위탁여부	- 여성가장훈련 : 미용사 자격증, 꽃방 창업, 의료수선사, 한식조리사 등 - 실업자재취직 훈련 - 고용촉진훈련 : 한식조리사, 상품포장반
고용유지 및 창출효과	- 식당, 파출 등 무료직업 소개 - 훈련생들 취업률 : 30% 정도
상근인원	- 4명 - 알뜰장터 : 자원자 - 전직 기업의 사무직 직원들 - 취업 상담 간사 모임 등을 통하여 서비스훈련
재원조달	- 노동부 운영비, 유료 강좌
지역고용 구조의 특성	- 강남 근접해 있으나 생활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고, 그렇다고 저소득층도 아니다. - 주거지역
대상집단의 특성	- 국졸에서 대졸까지 다양 - 전업주부 및 직업, 연령도 다양 -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절실하지는 않다. 직업 훈련이 취미 교육의 측면도 있다.
노조 및 지방관서와의 연계	- 노조와의 관계없음 - 동작구청 등과 취업정보 교환, 긴밀하지 않다.

<실태표-8> 부천 일하는 여성의 집

	내 용
설립연도 및 운영주체	- 1996. 7. - 온터 두레회 <부천 일하는 여성의 집> - 노동부 관할
업무내용	- 취업교육 : 한식조리사, 애니메이션관련, 꽃방, 컴퓨터, 제과제빵, 요리창업반 - 직업알선 : 교육생들 교육내용관련, 가사보조 등 - 실직가정 결연 사업으로 제빵제품들 바자회
정부실업대책 위탁여부	- 여성가장실업자 훈련 : 한식조리사, 꽃방, 제과제빵 등 - 실업자 재취직 훈련 : 요리창업반등
고용유지 및 창출효과	- 제과제빵 : 어린이집 등으로 납품, 자활공동체의 형태를 띄어가고 있음 - 교육생들 위주로 후속모임 결성 - 교육생들이 강사로도 진출 - 취업률 : 유료프로그램의 경우 50~60%, 정부사업의 경우 10~20%
상근인원	- 6명 - 보수 : 60~80만원선 - 사회복지사, 4년제 대졸 여성들 공채
재원조달	- 노동부, 유료수강료, 재단 전입금
지역고용 구조의 특성	- 일여집은 중동 신도시 단지에 위치, 따라서 백화점, 복지관등의 문화센터의 등장으로 일여집의 교육생들이 줄고 있다. - 부천은 공장이 많다.
대상집단의 특성	- 전업주부 - 수강료 인하 요구
노조 및 지방관서와의 연계	- 부천 여성노동자회와 연계 - 지방노동청과 정보교환, 긴밀하지는 않다.

<실태표-9> 인천 일하는 여성의 집

	내 용
설립연도 및 운영주체	- 1994. 7. - YWCA <인천 일하는 여성의 집> - 노동부 관할
업무내용	- 직업훈련 및 무료직업상담소 - 실직가정 대상 무료 급식 등
정부실업대책 위탁여부	- 여성가장 훈련 : 제과제빵, 간병인, 꽃방경영 등 - 실직자 재취업 과정 : 한식조리사, 방과후 아동지도사 등 - 고용촉진훈련 : 정보처리 기능사, 간병인 등
고용유지 및 창출효과	- 정부실업대책 사업에서는 고용창출 저조 - 유료 프로그램도 고용창출보다는 취미교육의 성격이 강함
상근인원	- 10명 - 대졸 직원들 공채 - 운영위원회, 특기 봉사 등 : 자원봉사
재원조달	- 노동부 지원, 법인 전입금, 유료 수강료 - 연간 4억5천
지역고용 구조의 특성	- 제조업분야의 공단지역 : 직접 연결되기 어렵다. - 취업교육이 취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
대상집단의 특성	- 전업주부들 많음 : 취업에의 욕구가 있는 - 훈련기간 연장을 원함 - 기술훈련의 경우 장기간의 숙련기간 필요, 현재의 직업교육으로 고용창출 불가능
노조 및 지방관서와의 연계	- 노조와의 관계없음 - 노동부 인력은행 및 지역고용안정센터와 정보교환

<실태표-10> 은평 일하는 여성의 집

	내 용
설립연도 및 운영주체	- 1998. 5. 15. - 한국문화복지협의회 <은평 일하는 여성의 집> - 노동부 관할
업무내용	- 직업알선, 취업상담. - 교육생들을 취업으로 연결.
정부실업대책 위탁여부	- 여성가장 실직자재취직 훈련 - 실직자 재취업 훈련 : 한식조리사, 영유아 산모 도우미, 양재 등 가족상태에 따라 훈련 수당 25만원에서 40만원선 - 두 번의 교육기회 확대되기를 원함
고용유지 및 창출효과	- 교육생들의 취업률 : 20~30% - 구인구직의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다. 3D업종 꺼림. 편한 파트타임 원함
상근인원	- 6명 - 보수 : 60~80만원선 - 전 여성신문사 직원, 문화복지회 직원들 및 공채 모집
재원조달	- 분기별 노동부 운영비 - 유료 수강료
지역고용 구조의 특성	- 사무실 공장이 없어, 구인구직 정체
대상집단의 특성	- 장사, 사무직 - 여성가장 : 이혼, 사별 - 훈련수당을 받으면서 다니는 이들의 경우 생계가 시급한 이들은 아님. - 취업에의 욕구가 절실하지 않음
노조 및 지방관서와의 연계	- 노조와의 관계는 없음 - 구청 및 지방노동청과 취업관련 정보 교환

<실태표-11> 마포신촌 일하는 여성의 집

	내 용
설립연도 및 운영주체	- 1998. 7. 28. - 한국 부인회 <마포신촌 일하는 여성의 집> - 노동부관할
업무내용	- 무료직업소개 - 취업교육 : 독서지도, 간병인, 꽃방경영 - 유료 프로그램 : 미용사, 컴퓨터 관련(웹마스터 등) 교육
정부실업대책 위탁여부	- 실직자 재취직 과정 - 실직여성가장 훈련과정
고용유지 및 창출효과	- 정부 위탁 교육의 경우 취업률 저조 -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취업률 30% 정도
상근인원	- 6명 - 무료 놀이방 운용: 자원봉사자 - 보수 : 100만원 - 전 여성단체 경험자들, 전직 교사, 전사무직 직원들 공채
채원조달	- 노동부지원금, 법인 지원금, 유료 수강료
지역고용 구조의 특성	- 전국적으로 교육을 받기 위하여 온다(탈지역적). - 서비스직 구인이 많지만, 서비스직 구직은 많지 않다. 구인구직의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다.
대상집단의 특성	- 미혼여성 : 기혼여성 = 2 : 1 -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분야 교육하려고 함. - 교육후 더 높은 단계의 교육 원함.
노조 및 지방관서와의 연계	- 노조관계 없음 - 서부노동청 및 노동사무소와 취업정보교환

<실태표-12> 송파 일하는 여성의 집

	내 용
설립연도 및 운영주체	- 1997. - 여성민우회 <송파 일하는 여성의 집>
업무내용	- 취업교육 및 직업알선 - 직업상담사 등 전문대 이상 고학력 미취업자 대상의 프로그램 마련
정부실업대책 위탁여부	- 여성가장취업훈련 - 실직자 재취직 훈련 - 실업극복 운동본부 지원
고용유지 및 창출효과	- 고학력 미취업자들의 경우 사무직 및 컴퓨터 관련 업종으로 취업률 높음 - 따라서 고학력 전문직 위주로 취업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상근인원	- 6명 - 보수 : 60 ~ 80 만원선 - 민우회 출신, 사무직 출신 직원
재원조달	- 노동부 지원, 여성민우회, 유료프로그램운영비
지역고용 구조의 특성	- 송파지역주민만 오는 것은 아님. - 취업에의 욕구가 절실한 이들이라기 보다는 자아계발을 위한 취업훈련
대상집단의 특성	- 고학력 전문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사무직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들 : 직업상담사, 사회보험사 등
노조 및 지방관서와의 연계	- 노조와의 관계없음 - 구청 및 지방 노동청과 정보교환

<실태표-13> 성남 일하는 여성의 집

	내 용
설립연도 및 운영주체	- 1998. 5. - 성남 여성의 전화 <성남 일하는 여성의 집> - 노동부 관할
업무내용	- 취업상담 : 무료직업소개소 - 집단상담 : 여성의 전화가 추진, 정보제공, 후원, 교육 - 실업극복 : 겨울나기, 실직가정에 대한 지원. - 유료 프로그램 : 한식조리사, 의료수선사, 컴퓨터 관련 교육, 발판리사 등
정부실업대책 위탁여부	- 실업극복 운동본부 지원 : 공공근로 구직상담원 - 실직자 재취직 프로그램, 여성가장 훈련 프로그램, 고용촉진 프로그램
고용유지 및 창출효과	- 취업 교육이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음. 교육생들 중 20~30% 정도 취업
상근인원	- 8명 - 보수 : 50~70만원정도 - 여성의 전화 실무자들, 상담원들, 단체의 활동가들. - 주변학교 학생들 자원봉사
재원조달	- 노동부+ 성남여성의 전화+ 유료프로그램
지역고용 구조의 특성	- 분당과는 달리 성남은 빈민들이 많은 지역. - 공장이 많고, 남성생산직 위주.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없음. 인구밀도에 비해 사회시설이 없음.
대상집단의 특성	- 다양. 판매원, 전직 사무직, 서비스직 등. 사별, 이혼, 무능력한 남편으로 취업 필요한 여성들
노조 및 지방관서와의 연계	- 성남여성노동자회 와 성남여성의 전화와 교류 - 지방노동청 및 구청과 취업정보 교환

3.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고용안정센터

<실태표-14> 실업자 종합 서울 지원센터

명 칭	실업자종합서울지원센터
단체성격	- 서울센터는 1999년 초 노동·사회단체의 합의로 구성된 것임, 따라서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단체에서 실무자를 파견하여 구성함, 단체 중에서도 민주노총 파견 실무자의 비율이 높음
주대상집단	- 중고령, 저학력, 저소득 실업자, 단순노무직에 종사했던 실업자가 절대 다수임, 남성이 70%, 여성이 30% 정도를 차지함, 모자가정, 부자가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자리 연결 및 일자리 마련 사업(구직·구인상담, 취업상담정보시스템 개발완료, 공공근로 사업시행) ② 실업자를 위한 자활지원 및 복지사업(실직가정돕기 범국민 결연 운동, 희망의 카드사업, 법률상담) ③ 실업자를 위한 기획사업 : 실업자와 함께 하는 '99 희망 만들기 한마당 진행, '99 희망의 행진, '99 희망 문화제, 자치모임방(실업자 사랑방) 운영, 실업자를 위한 무료 생활한방 건강프로그램(9월 9일 ~ 10월 14일 매주 목요일 진행), 장애아 부모들의 모임(월 1회 모임으로 정보공유와 토론진행) ④ 민-민, 민-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 서울지역 민-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공공근로 민간단체 참여 민-관 합동 공청회』 개최 ⑤ 기타 실업자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법인 취득, 홍보활동, 대외협력활동, 수련회)

재 원	- 회계연도 1999년 2월 ~ 2000년 1월까지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에서 사업비, 운영비, 관리비, 활동비 전액 지원 받기로 약정함, 기획사업의 경우 기업에서 협찬을 받아 재정 일부를 충당함
상근인원	- 총 14인(사무국장 1인, 기획총무팀 4인, 지역지원팀 3인, 고용복지팀 3인, 상담팀 3인)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에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상담자가 있을 경우 센터로 연계하여 센터에서 상담 활동 수행, 센터 설립 당시 민주노총이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됨
공공고용안정조직 연계여부	- 일상적 연계는 없음, 사안별 연계가 진행됨, 센터에서는 노동부 Work-net을 활용하여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망을 활용하는 수준임
실업대책사업 위탁	- 공공근로 민간위탁 사업 3단계에서 사업 확정되어 현재 시행 중임

<실태표-15> 하남지역 건설일용 노동조합

명 칭	하남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
단체성격	- 민주노총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연맹 산하 지역노동조합
주대상집단	- 하남지역 건설노동자(이혼가정 10% 정도)
주요업무	① 상담(산재,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② 무료취업알선센터 사업(1999년 통계 연인원 4만 명 정도),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지원 ③ 산림청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100명) ④ 지자체 위탁사업(도배, 숲가꾸기, 소규모 공사계약 등)
재 원	- 조합비와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지원, 기타 기금으로 운영
상근인원	- 5명(상담, 회계, 전산, 구인구직 담당)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연맹 및 지역 실업대책위와 연계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공공근로와 관련해 협의하는 정도
실업대책 사업 위탁	- 산림청 및 지자체 공공근로 위탁사업 수행,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가 지원한 무료취업알선센터 사업

4. 종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실업자지원센터

<실태표-16> 성북 고용안정센터

명칭	성북고용안정센터
단체성격	- 성북자활지원센터(성공회 나눔의 집)에서 구성, 지역운동기반을 가지고 있다.
주대상집단	- 임시직, 일용직 저소득 주민(건축, 경비, 식당, 파출, 봉제 등, 중장년층 다수)
주요업무	① 취업알선, 정보수집제공 ② 실직가정 지원사업
재원	- 자활지원센터 예산 일부, 북부실업자사업단에서 지원
상근인원	- 4명(3명은 보조인력, 공공근로 배정)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서울북부 실업자사업단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실업대책 사업 위탁	- 해당사항 없음
특기사항	- 나눔의 집과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이 성북복지연대 구성(1999년 3월), 복지편람 및 복지도 작성, 푸드뱅크 운영

<실태표-17> 노원 고용지원센터

명칭	노원고용지원센터
단체성격	-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에서 설립, 지역운동기반을 가지고 있다.
주대상집단	- 저소득층, 실업자(임시직, 일용직, 주로 건설, 파출 등)
주요업무	① 실업자 지원사업(푸드뱅크 쌀 지원) ② 무료급식 ③ 취업알선
재원	- 후원(지역 종교단체, 노원시민모임)
상근인원	- 소장 1명, 실무자 2명, 공공근로 2명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북부실업자사업단과 밀접한 연계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실업대책 사업 위탁	- 해당사항 없음
특기사항	- 서울북부 실업자사업단 노원지부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 연계되어 사업을 하고 있다.

<실태표-18> 보현의 집

명칭	보현의 집(용산구)
단체성격	-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주대상집단	- 실직노숙자
주요업무	- 실직노숙자 숙식제공
재원	- 종단에서 운영, 서울시에서 식대 일부 지원
상근인원	- 3명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실업대책 사업 위탁	- 해당사항 없음

<실태표-19> 시립 영등포 근로자 합숙소 보현의 집

명칭	시립영등포근로자합숙소 보현의 집
단체성격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에서 서울시 사업 위탁운영
주대상집단	- 실직노숙자(서울, 경기지역 전체에서 오기 때문에 다양함)
주요업무	① 실직근로자 숙식제공 ② 일자리제공(공공근로, 일용직, 구인요청 연계), 일용직 경우 인력시장 쪽으로 ③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④ 의료서비스
재원	- 정부부담이 대부분, 일부 조계종 부담, 정부지원만으로는 부족(특히 식사에 대한 후원사업 필요), 영등포를 제외하고는 조계종 종단 부담이 더 많다.
상근인원	- 13명, 모두 종단에서 나온 인원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구직신청서 제출 시에만 연계, 워크넷에 올라있는 일자리가 요구하는 연령대, 학력이 맞지 않고, 주로 자격증을 많이 요구한다. 직업훈련도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특히 공공근로를 하면서 직업훈련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공공근로를 일찍 마치고 직훈을 갈 경우 수당이 적게 나오기 때문)
실업대책 사업 위탁	- 확보인원 200명, 현재 140여명 공공근로
특기사항	- 자활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하다. 고용정보 제공 등 관과의 연계의 심화가 필요하다.

<실태표-20> 내일을 여는 집

명칭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내일을 여는 집
단체성격	- 기독교장로회총회 소속
주대상집단	- 실직노숙자, 생활보호대상자(저소득층, 저학력, 결혼가정 다수, 지역, 직종 다양)
주요업무	- 점심식사 제공(노숙자, 생활보호대상자), 50~60명/일 (40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구조)
재원	- 교회재원, 푸드뱅크 지원(교단이 푸드뱅크 소속)
상근인원	- 6명(서대문구청 1명, 도우미 4명, 구세군쉼터 1명)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서대문구청에서 직원 파견, 도우미 사업
실업대책 사업 위탁	- 해당사항 없음

5. 사용자 단체에서 주관하는 취업알선센터

<실태표-21>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 특별시회

명칭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단체성격	- 사단법인
주대상집단	- 건설 관련 구직자, 구인업체
주요업무	- 무료직업소개(건설기술자, 기능공), 소규모 중소건설업체(회원사 32,000개, 서울지역 6,000개)를 관장하던 중 구직자보다 회원사의 인력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립(인력공급, 임금조정 등), IMF 이후 수요공급 반대 현상 발생, 현재 기능공(현장총무, 반장), 일용직, 건설 관련 사무직 직업소개
재원	- 자체적으로 운영
상근인원	- 2명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실업대책 사업 위탁	- 해당사항 없음

<실태표-22> 대한건설기계협회

명칭	대한건설기계협회
단체성격	- 사단법인
주대상집단	- 건설기계 조종사
주요업무	- 무료직업소개(건설기계 조종사, 주로 중장비), 구직관련서류 없음, 전화로 접수가능
재원	- 자체적으로 운영
상근인원	- 3명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실업대책 사업 위탁	- 해당사항 없음

<실태표-2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력정보센터

명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력정보센터
단체성격	- 1994년도부터
주대상집단	- 중소기업(건축, 토목, 전기, 화학, 측량, 제도, 전자, 금속, 일반사무, 무역직, 경리직, 영업관리, 판매, 서비스 직), 사무, 제조가 다수
주요업무	- 구인·구직 연결(상담은 없음)
재원	- 자체적으로 운영
상근인원	- 1명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워크넷과 연계(서울인력은행으로 구인업체 및 구직자 자료를 취합해서 보냄)
실업대책 사업 위탁	- 해당사항 없음

<실태표-24>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명칭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단체성격	- 사단법인
주대상집단	- 건설계통 구직자
주요업무	- 무료직업소개(건축, 토목, 기계, 안전관리, 국토개발 파트로 분류), 우편, 팩스 접수
재원	- 자체적으로 운영
상근인원	- 4명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실업대책 사업 위탁	- 해당사항 없음

<실태표-25>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산업인력정보센터

명칭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산업인력정보센터
단체성격	- 1994년 7월 설립
주대상집단	- 구인업체(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직종), 구직자(사무 관리, 영업, 생산관리, 경리 등)
주요업무	① 구인-구직 연결 ② 채용박람회(연 2회) ③ 역사 현장채용
재원	- 자체적 사업비로 운영
상근인원	- 2명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실업대책 사업 위탁	- 해당사항 없음

<실태표-26> 인천경영자협회 부설 인재은행

명칭	인천경영자협회 부설 인재은행
단체성격	- 사단법인, 1983년 설립
주대상집단	- 구직자, 구인업체(생산직은 구직이 없는 상태)
주요업무	① 구인-구직 연결(일반사무직, 무역, 기술, 경리, 생산 관리) ② 고령자 인재은행 별도로 운영
재원	- 자체예산으로 운영, 고령자 인재은행 경우 노동부에서 운영비 일부 지원
상근인원	- 3명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경인지방노동청 인천인력은행과 분기마다 취업정보 교환(구청, 대학교,공단본부, 일하는 여성의 집 등 참여)
실업대책 사업 위탁	- 해당사항 없음

6. 시민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고용안정센터

<실태표-27>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명칭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단체성격	- 부천시 소재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연합, 8개 단체 상 임대표단 구성(경실련, 부천시민연합, 사회복지협의회, 상공회의소, 불교, 기독교 등)
주대상집단	- 부천시 저소득 가정, 실직자(일용직, 임시직 증가, 중소기업 및 유통업체 다수)
주요업무	①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결연 사업 ② 공공근로위탁사업(오리농장, 10명) ③ 저소득 가정 지원사업 ④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제안사업(실직자 상담사업, 희망의 카드사업) ⑤ 정부정책 모니터사업 ⑥ 지역단체간 네트워크사업
재원	- 시예산 보조,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제안사업 경비
상근인원	- 6명(공공근로 배정으로 시작)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부천노동조합(겨울나기사업, 일상적 결합은 없음), 부 천건설일용노동조합(공공근로위탁과 관련, 협의)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취업상담을 통해 시청 취업정보센터로 연결
실업대책 사업 위탁	- 공공근로위탁사업 오리농장(10명 참여), 추후 생산자협 동조합 구성계획
특기사항	- 부천시 민간단체의 대부분을 포괄, 네트워크 형성 - 관과의 협의기구인 부천시실업대책협의회 구성

<실태표-28> 성남시민실업극복운동본부

명칭	성남시민실업극복운동본부
단체성격	-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청년단체 자원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다.
주대상집단	- 실직자, 저소득층(남성 경우 주로 일용건설직, 여성 경우 주로 식당, 파출부, 기타 자영업, 경비, 공단내 영세업체(봉제, 전자조립 등), 결혼모자 가정 다수)
주요업무	① 생계비 지원(분기별 150가정, 지금까지 450가정 지원) ② 희망의 카드 사업(정부 실업예산) ③ 동사무소와 행정정보 서비스 연계 ④ 4차시기 공공근로 민간위탁 ⑤ 실업기금 모금(상반기 콘서트 통해서, 1억 규모, 7천 만원 지원, 기업 및 성남시와 연계) ⑥ 저소득가정 겨울나기 사업(김장)
재원	- 국민운동본부, 정부(시 실업예산, 사업비, 인건비)
상근인원	- 사무국 상근 13명(공공근로 11명)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민주노총 경기동부지구 차장이 집행위원으로 참가, 적극적 결합은 어렵다.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생계비 지원 관련 실직자 확인시 연계, 유용한 정보가 거의 없다. 저소득층이 워낙 많고 장기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관 주도 사업으로는 신규 실업자 정도를 포괄하는 규모일 뿐
실업대책 사업 위탁	- 공공근로 사업으로 운영중인 보도블럭 깔기 사업에 30명 정도 참여, 협동조합 설립(1999년 5월), 임금은 현재 시에서 공공근로 형태로 지급
특기사항	- 기업 및 관과의 협력 하에 사업을 진행, 공공근로 사업을 생산자협동조합 형태로 발전시킴

<실태표-29>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명칭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단체성격	- 인천시 소재 민간단체,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연합, 인천지역에 8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다.
주대상집단	- 저소득층 실직자(자영업, 일용직, 임시직 다수)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연 사업(100세대 월 10만원) ② 1만 세대 겨울나기 사업(지역후원, 성금) ③ 의료지원사업(부평, 인천, 주말마다 격주로 600여 명) ④ 결식아동지원(8000명) ⑤ 정책사업(모니터링, 토론회 등) ⑥ 민간협력사업(관의 행정력과 민간의 아이디어 결합, 실업대책협의회 구성) ⑦ 취업촉진사업(이동형 구인구직, 고령자 중심 취업박람회, 실업정보신문 발행) ⑧ 자활사업(공공근로 민간위탁,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
재원	- 참여단체 분담금 및 회원회비, 인천시,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지원, 지역성금
상근인원	- 본부 6명, 8개 센터에 2명씩 근무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공동대표, 공동집행위 참여 - 겨울나기 사업시 연계(민주노총에서 지원)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일상적 구직정보 공유는 없으며, 사업에 따라 연계
실업대책 사업 위탁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30명, 공공근로 민간위탁)
특기사항	- 인천에서 실업대책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으며, 관과의 장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추어 나가려 하고 있다.

7. 지역운동단체에서 생성된 고용안정센터

<실태표-30> 서울북부 실업자사업단 성북지부

명칭	서울북부 실업자사업단 성북지부
단체성격	- 철거, 주거권과 관련해서 주민활동을 하던 자원들이 1998년 11월 창립(성공회 나눔의 집 주축)
주대상집단	- 저소득, 임시직 실업자(일용건설직, 파출직 다수, 저학력, 결혼가정 다수)
주요업무	①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결연 사업 ② 공공근로 민간위탁 ③ 취업알선(성북 나눔의 집 자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일용직 포함 200건, 두레 건축을 통해 건설일용취업알선) ④ 무료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⑤ 정책사업(실업극복과 연대 발행배포, 전국실업연대 주최의 실업예산삭감반대 집회 참여, 서실련 주최의 토론회 참여 등)
재원	- 회비, 후원금
상근인원	- 3명(2명은 공공근로 배정)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성북고용안정센터(성공회 나눔의 집)와 밀접한 관련,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및 서실련, 전국실업연대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구청 취업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 이용, 제공되는 정보들의 적실성이 떨어짐
실업대책 사업 위탁	- 음식물찌꺼기재활용(서울시공공근로민간위탁, 64명 참여), 사랑의 시래기 나누기(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제안사업), 지하철소파청소(보건복지부공공근로민간위탁), 초중고 형광등청소(서울센터의 서울시공공근로민간위탁에 인력파견), 일일공공근로연계(중부일일취업센터와 연계), 수해복구(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지원)
특기사항	- 지역운동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지부간의 결합도가 높고, 서실련, 전국실업연대, 민주노총고용지원센터, 대한성공회 등과 연결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실태표-31> 서울북부 실업자사업단 노원지부(본부)

명칭	서울북부 실업자사업단 노원지부(본부)
단체성격	- 철거, 주거권과 관련해서 주민활동을 하던 자원들이 1998년 11월 창립(성공회 나눔의 집 주축)
주대상집단	- 저소득 가정(70% 이상 결손가정), 실직자(중고령, 임시직, 일용직, 주로 건설, 파출)
주요업무	①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결연 사업 ② 일자리창출사업(나눔건설일용노동자공동체, 음식물 찌꺼기재활용, 생명의 숲가꾸기 등) ③ 정책사업(실업극복과 연대 발행배포, 전국실업연대 주최의 실업예산삭감반대 집회 참여, 서실련 주최의 토론회 참여 등) ④ 생활지원사업(의료서비스, 먹거리지원, 무료급식, 결식아동지원, 이미용서비스 등) ⑤ 취업알선 ⑥ 신문발행, 교육사업 등
재원	- 회비,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지원, 공공근로위탁사업비, 지원팀(학계, 종교계 후원)
상근인원	- 4명(야학, 노동운동, 지역운동)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민주노총, 서실련, 북부노동사회, 노원고용지원센터 등과 연계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실업대책 사업 위탁	- 음식물찌꺼기재활용(공공근로민간위탁), 간병인 사업(특별취로 공공근로민간위탁, 노원자활지원센터 협조), 숲가꾸기(공공근로), 사랑의 시래기 나누기(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제안사업), 폐컴퓨터 완전해체를 통한 재활용(서울시공공근로로 제안), 수해복구(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제안사업), 나눔건설일용노동자공동체(보건복지부, 노원자활지원센터 협조, 생산자협동조합에서 신용협동조합으로의 발전 고민중)
특기사항	- 지역운동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지부간의 결합도가 높고, 서실련, 전국실업연대, 민주노총고용지원센터, 대한성공회 등과 연결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실태표-32> 서울북부 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

명칭	서울북부 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
단체성격	- 철거, 주거권과 관련해서 주민활동을 하던 자원들이 1998년 11월 창립(주거연합 중심)
주대상집단	- 저소득, 임시직 실업자(일용건설직, 파출직 다수, 저학력, 결혼가정 다수)
주요업무	①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결연사업 ② 공공근로 민간위탁 ③ 취업알선 ④ 무료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⑤ 정책사업(실업극복과 연대 발행배포, 전국실업연대 주최의 실업예산삭감반대 집회 참여, 서실련 주최의 토론회 참여 등)
재원	- 회비, 후원금,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지원
상근인원	- 3명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서실련, 전국실업연대, 민주노총고용지원센터와의 긴밀한 연계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실업대책 사업 위탁	- 음식물찌꺼기재활용(공공근로민간위탁), 간병인 사업(특별취로 공공근로민간위탁, 노원자활지원센터 협조), 숲가꾸기(공공근로), 사랑의 시래기 나누기(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제안사업), 폐컴퓨터 완전해체를 통한 재활용(서울시공공근로로 제안), 수해복구(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제안사업)
특기사항	- 지역운동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지부간의 결합도가 높고, 서실련, 전국실업연대, 민주노총고용지원센터, 대한성공회 등과 연결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실태표-33> 관악주민연대

명칭	관악주민연대
단체성격	- 빈민운동(지역운동)을 하고 있던 지역 내 여러 센터(공부방, 놀이방 등)들이 모여서 지역주민연대 결성(민간단체연합 아님), 센터 들 및 개인들의 연대, 빈민운동에서 자생적으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공부방, 놀이방 등이 재개발 이슈가 떠오르면서 하나의 단체를 구성할 필요를 느끼게 되어 결성
주대상집단	- 80%가 일용건설직, 그 외에 판매, 영업, 보험 등 상용직, 여성의 경우에는 식당, 청소, 파출부 등 임시직, 전체의 90% 정도가 임시직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해오는 사람의 70% 정도가 여성, 모자가정이 많은 빈민 밀집지역
주요업무	① 결연 사업 ② 실업극복 '한가족운동'(1, 2, 3차 제안사업) - 지역 안전망 구축, 실업자 가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해체 방지, 지역 내 공부방, 놀이방, 병원 등으로 연결,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③ 관악자활센터 프로그램(특별취로사업과 공공근로 위탁사업 - 도색과 집수리 등, 장애인과 노인 등에 먹거리를 배달하는 지킴이 사업)
재원	-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정부, 지역후원(회비)
상근인원	- 본부 6명 포함 9명(생활안정센터 파견 3명)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구청의 원스탑센터와 인력은행으로 연결시키고 있으나 거의 취업이 안되는 형편, 구청이나 인력은행의 구인 정보의 양이 적기도 하고 실직자들에게 알맞은 일자리 역시 없다.
실업대책 사업 위탁	- 관악자활센터 프로그램인 특별취로사업과 공공근로 위탁사업(도색과 집수리 등, 장애인과 노인 등에 먹거리를 배달하는 지킴이 사업)
특기사항	-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센터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관악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준)를 설립했다.

<실태표-34> 고용안정과 실업자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동부대책위

명칭	고용안정과 실업자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동부대책위
단체성격	- 용인청년일꾼들, 성남청년회 등에서 활동하던 자원들이 지역활동을 기반으로 구성
주대상집단	- 건설일용직, 영세업체, 주택가 가내수공업영업장(상대원지역의 실직율은 50% 정도), 분당까지 포함한 인구가 90만, 그중 10만이 건설일용직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연 사업(실직가정돕기사업) - 1998년 12월부터 ② 무료공부방, 무료급식 - 1998년 10월부터 제안사업으로 진행, 1999년 7월까지 재정이 지원되었고 그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진행중, “푸른 학교” 실직가정의 초·중등 자녀 대상 생활지도, 급식은 지원이 끊긴 이후로 지역의 제과 제빵업체와 연결 급식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급식이 끊긴 이후로 아이들의 발길이 많이 끊어짐 ③ 취업상담 및 알선 - 성당에서 운영하는 노숙자쉼터 ④ 금속연맹 쌀나누기 사업 ⑤ 화학연맹 겨울나기 사업 ⑥ 함께 하는 주부모임(바자회, 주부대학 등), 청년단체에서 진행하는 청년대학(취미, 교양 프로그램) ⑦ 숲가꾸기 공공근로 및 인력시장 연결(건일노) ⑧ 지역 내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실업실태 조사 ⑨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에 신청하는 업무 등
재원	-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결연 사업 지원, 단체분담금(회비)으로 무료공부방사업 임대료 충당
상근인원	- 대책위 상근직원은 3명(나머지 회원들은 각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중)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연맹 및 화학연맹과 연계된 사업 수행 - 건일노, 실업자노조(상대원 지역), 여성노조와 공동으로 구성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으로 고용정보 취합 제공, 직접적 대면은 없음
실업대책 사업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공부방사업 초기지원을 받다가 행정적인 문제발생으로 지원이 끊김, 교사들 공공근로신청도 안되는 상태임 - 자체적 실업대책 사업 시행(건일노의 숲가꾸기, 건설일용직 일자리 창출), 푸른 학교(교사채용, 급식의 경우 아주머니들 채용, 제안사업의 인건비 5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현재는 자원활동 상태임)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지역 다른 대책위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건설일용노동조합과의 긴밀한 연계

8. 사회복지법인, 복지관

<실태표-35> 방배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설립연도 및 운영주체	- 1998. 3. - 까리타스 수녀원 <방배종합사회복지관> - 보건복지부 관할
업무내용	- 유료프로그램 수익을 재가복지 및 저소득 가정 지원(밀반찬지원 등) - 직업알선 : 파출, 간병 등 일용직 위주 - 희망의 집 : 노숙자 쉼터
정부실업대책 위탁여부	- 없음
고용유지 및 창출효과	- 유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용 창출되지 않음. - 자활위주의 사업계획
상근인원	- 20명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 보수 100만원 이상 - 자원자들 : 사랑의 식당, 저소득가정 반찬배달, 이동목욕, 맞벌이부모 아동지도 프로그램
재원조달	- 시비+ 까리타스 수녀회+ 유료프로그램 운영비 수익 - 연간 7억
지역고용 구조의 특성	- 방배, 남현, 사당 지역주민 대상 - 방배동을 부촌으로 인식하나 저소득 가정 많다. - 빈부 차가 매우 심함. 파출 등의 일용직 종사자가 대부분
대상집단의 특성	- 저소득 가정의 경우라 할지라도 3D업종 기피, 구직 구인의 수요공급 맞지 않음
노조 및 지방관서와의 연계	- 노조와의 연계 없음 - 서초구청 사회복지과와 구인 구직 만남의 장 주최

<실태표-36> 서초종합사회복지관

	내 용
설립연도 및 운영주체	- 서초종합사회복지관 - 서울시 서초구 운영
업무내용	- 직업교육 및 직업상담, 취업알선(미용, 한식조리사, 꽃방창업) - 어린이 교실 운영
정부실업대책 위탁여부	- 없음
고용유지 및 창출효과	- 복지관의 경우 취업 창출의 효과를 위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취미교육이 성격이 강함
상근인원	- 30명 정도 - 사회복지사 및 공무원들
채원조달	- 서초구 지원 및 유료프로그램
지역고용 구조의 특성	- 양재 역에 위치한 이 복지관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취미생활을 위한 역할을 수행
대상집단의 특성	- 주부대상의 프로그램, 아동지도 프로그램
노조 및 지방관서와의 연계	- 노조와의 관계없음 - 서초구 운영이므로 구와의 관계 긴밀

<실태표-37> 사랑의 전화

명칭	사랑의 전화
단체성격	- 심철호씨가 운영하는 복지기관
주대상집단	- 실직노숙자
주요업무	① 전화상담 ② 취업정보센터 ③ 취업교육(텔레마케팅 교육) ④ 실직 노숙자 일시보호시설(게스트하우스-쉼터)
재원	- 국가에서 정해진 예산(1년 예산 중 2억 정도), 기타 부분은 후원사업, 교육사업 등 실비사업 위주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 무료 위탁사업(텔레마케팅 교육)에서 1인당 실 교육비 지원
상근인원	- 상근직원 60여명 정도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실업대책 사업 위탁	- 텔레마케팅 교육(산업인력관리공단 위탁사업)
특기사항	- 서울, 경인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실태표-38>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취업정보종합센터

명칭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취업정보종합센터
단체성격	- 사회복지법인 한국여성복지연합회
주대상집단	- 지역 저소득층, 실직자(식당, 파출, 경비, 운전직, 사무직)
주요업무	① 구인-구직 연결(취업정보제공, 도서관 운영) ② 재취업교육(PC, 조리사, 미용사 등, 실직증명자 무료교육) ③ 푸드뱅크 사업 ④ 기타 복지제공
재원	- 복지관 예산, 구청에서 일부 지원
상근인원	- 3명(복지관 직원 1명, 공공근로 2명, 사회복지사 자격소유)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노원구청 취업정보센터와 업무연계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밀접한 연계는 없는 상태, 현재 정보제공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실업대책 사업 위탁	- 직업훈련(실직자 무료교육)

<실태표-39>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내 북부취업정보센터

명칭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내 북부취업정보센터
단체성격	- 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회
주대상집단	- 주로 30~40대, 40대가 60% 정도, 남자 70%, 저소득층 대부분
주요업무	①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 ② 직업훈련
재원	- 복지관 예산에서 독립적으로 책정
상근인원	- 상담원 1명, 재가복지과 2명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실업대책 사업 위탁	- 해당사항 없음

<실태표-40>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자활지원사업

명칭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자활지원사업
단체성격	-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주대상집단	- 저소득 주민
주요업무	① 회원제로 운영, 취업정보 확인. 취업정보 알선(구청 취업정보센터 설립후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② 자활사업 계획 : 물세탁, 미용실, 목욕탕, 찜질방 등 (1단계, 1월부터), 제과제빵, 유치원과 연계, 납품(2단계), 한과업(3단계)
재원	- 재단 재원
상근인원	- 1명(주민 2명 결합, 시작)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실업대책 사업 위탁	- 해당사항 없음
특기사항	- 자활사업의 경우 재단에서만 협조, 실업극복국민운동 본부에 공모했으나 아직 결과가 안나옴

<실태표-41>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무료직업소개소

명칭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무료직업소개소
단체성격	- 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회
주대상집단	- 영구임대아파트지역, 고령, 주로 서비스업종(식당, 청소, 경비)
주요업무	- 구인·구직 연결
재원	- 정부보조금, 법인 재정
상근인원	- 1명(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음)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특정구인이 있을 때 연결(월계, 복부)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구직신청, 실업급여 관련해서 주민들 연결
실업대책 사업 위탁	- 해당사항 없음
특기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재야운동단체에서 주관하는 고용안정센터

<실태표-42> 열린사회동대문중랑시민회

명칭	열린사회동대문중랑시민회
단체성격	- 서울민주시민연합(전 서울민청련)과 서울지역겨레사랑 지역운동연합(전 서울국본)이 1998년 통합 구성
주대상집단	- 지역 저소득층 주민, 실직자(일용건설, 파출 등 단순직 다수, 모자가정 증가추세)
주요업무	① 결연 사업 ②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료지원) ③ 방과후 학교 ④ 직업상담, 알선(취업센터, 여성의 집으로 연결해주는 업무)
재원	-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서 지원, 회원회비, 지역 후원
상근인원	- 5명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실업대책 사업 위탁	- 해당사항 없음
특기사항	- 서울 10개 지부, 본부는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소재, 북부지부에서 무의탁노인 집수리 자활사업 실행 중, 서실련 소속

<실태표-43>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

명칭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
단체성격	- 서울민주시민연합(전 서울민청련)과 서울지역겨레사랑 지역운동연합(전 서울국본)이 1998년 통합 구성
주대상집단	- 저소득, 저기능, 저학력 실직자
주요업무	① 음식물재활용사업(230여 세대 수거, 퇴비화) ② 장애인가정 자활지원사업 실태조사 ③ 결연 사업(결식아동지원, 방과후 사업) ④ 실직여성가장을 위한 의료지원사업(사랑의 친구들) ⑤ 취업창구로 안내, 연결
재원	- 회비, 후원회비, 공모사업 경비
상근인원	- 14명(비상근 포함)
노조 또는 민간단체 연계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공고용 안정조직 연계여부	- 공공근로 지원 등에 있어서의 협의, 그러나 관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의 적실성은 많이 떨어지는 상태, 주로 서울센터나 직업훈련기관으로 연결
실업대책 사업 위탁	- 해당사항 없음
특기사항	- 서울 10개 지부, 본부는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소재, 북부지부에서 무의탁노인 집수리 자활사업 실행 중, 서실련 소속

【별첨】 실태조사 면접지

민간 고용안정조직 운영현황, 특성, ressource,
주요 사업, 실업자 호응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

1. 주요 업무 내용 :

2. 재원 :
 - ① 어떤 방식으로 마련되는가
 - ②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의 지원 여부
 - ③ 정부 실업대책 사업 위탁 여부
 - ④ 규모 등

3. 상근인원 :
 - ① 규모
 - ② 자원자 여부
 - ③ 보수
 - ④ 인적 특성
 - ⑤ 전문적 고용안정 서비스 훈련 여부 등

4. 노동조합 지역조직과의 연계 현황:
 - ① 지역 지부, 본부, 또는 산별의 지역조직과 연계된 사업 하는지
 - ② 또는 공동으로 구성된 대책본부인지
 - ③ 노동조합 조직과 연계가 실업자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

5. 실업자의 특성 :

- ① 인지도
- ② 만족도
- ③ 주로 원하는 서비스
- ④ 서비스 이용 실업자의 전직별, 업종별, 성별, 가족상태별 특성
- ⑤ 실업자의 시급한 요구
- ⑥ 지역 고용구조의 특성

6. 관주도 고용안정조직과의 상호작용 :

- ① 지방노동관서와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는지
- ② 정보제공
- ③ 구인·구직 등 정보와 알선과정에서의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
- ④ 지역 관주도 실업대책 사업의 운영현황

7. 정부 실업대책 사업의 일부 수행 여부 :

- ① 직업훈련 및 공공근로 등의 알선?
- ② 또는 자원적 실업대책 사업 시행 등.

8. 지역의 실업대책 기타 조직 현황

<참고문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실업대책본부, 정부의 실업대책 및 예산집행 모니터링 종합 보고서, 1999. 5. 11.
- 권오광, “민간단체에서 바라 본 장기실업자의 실태와 과제”, 부천시 실업극복 대토론회 -부천시역 장기실업자 실업문제와 그 대안-, 1999. 10. 28.
- 권혜자·박선영, 비정규노동자의 규모, 법적 지위, 조직화 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9.
- 김수현, “사회적 연대의 제도화를 위한 자활지원”, 월간 리포트, 1999. 9.
- 김신양, “제3섹터 건설의 의의와 활용”, 월간리포트, 1999. 5.
- 김완석, “성남시 실업대책과 공공근로 민간위탁”, 성남시민실업극복운동본부, 1999.
- 김홍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민·관 협력방안 -제3섹터 건설을 중심으로-”, 성남시민실업극복운동본부, 1999.
- 민주노총, “공공근로 민간 단체 참여 활성화 방안”, 공청회 자료집, 1999. 6.
- 박순희, “부천시와 민간단체 실업사업 평가”, 부천시 실업극복 대토론회 -부천시역 장기실업자 실업문제와 그 대안-, 1999. 10. 28.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7.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 대비표, 1999. 8, 엄규숙·김연명·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동조합, 별첨자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9.

- 엄규숙, “’99 실업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1999a(미발간).
- 엄규숙, “독일의 고용보험 및 노동시장정책에 노동조합의 참여 현황”, 권현지·엄규숙·이호창, 고용정책 -고용보험제도와 노조의 참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9b.
- 엄규숙·김연명·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동조합,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9.
- 이강원, “실업자 재취직 직업훈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 실업대책 평가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 1999. 5. 11.
- 이장원·김영미·김수현·이원익, 저소득 실직자 자활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9.
- 이재관, “공공근로사업 민간참여 현황 및 계획”, 성남시민실업극복운동본부, 1999.
- 유길상, “직업안정조직의 확충방안”, 고용보험동향, 1998. 가을
- 유길상 외, 직업안정인프라의 재구축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9
- 장원봉, “성남시 공공근로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평가 및 활성화 방안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의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성남시민실업극복운동본부, 1999.
- 정무성, “DJ노믹스와 민간 사회안전망”, 월간 리포트, 1999. 5.
- 정인수·박상민,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한국노동연구원, 1999.
- 한국노동연구원,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1998.
-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 모니터링 보고서(각월 호)
- 한국노총, 경제위기와 노동운동, 1998.
- 한국복지연구원, 한국사회복지연감, 1999.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실업대책본부, 공공취업알선기관 모니터 보고서, 1998. 11. 30.

[주요 약력 및 저서]

연세대 사회학과 학석사
독일 마부룩 필립스 대학교 철학 및 사회과학부 철학박사
(사회복지학 전공)
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

- 국가 복지정책을 통한 모성 및 어머니 취업의 조절 양상 - 독일과 한국의 비교연구 (Aspekte staatlicher Regulierung der Mutterschaft und der Müttererwerbstätigkeit durch die staatliche Sozialpolitik-Eine Vergleichsstudi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Südkorea) : 독일 마부룩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년 3월
- 「서유럽의 복지제도와 여성정책」, 『연세여성연구』 제4호 1998.
-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한국노총, 경제위기와 노동운동 - 현상과 과제 -』 1998.
- 「사회국가의 위기와 독일 연금제도의 재구성」, 『동향과 전망』 1999년 3월호.
- 『고용정책·고용보험제도와 노조의 참여』 공저, 1999년.
- 『경제사회변동에 따른 사회보험제도의 재구성과 노조의 대응전략』 1999년.
- 『노동기준과 무역·투자의 연계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공저, 1999년.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과 노동조합』 공저, 1999년.
-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도입방안』 공저, 1999년.

노총연구원 연구서 65

고용안정조직과 직업훈련 연계방안 I

1999년 12월 22일 인쇄

1999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박 仁 相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代) 02-782 -3884

등 록 81. 8. 21 (13-31호)

인 쇄 삼 영
 (代) 02 - 2279 - 6292

가격 : 5,000원